

**철도 노동자
강제전출 중단하라**

삼성전자서비스
페업 철회하라

화물 노동자 재산권 보장·직접운송의무제 폐지

규제 완화 선언 —
신자유주의의 투사
박근혜

3면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 착취 강화

16면

경고! 프랑스 나치의 전진과 반나치 운동

6~7면

서방 대 러시아,
'신냉전'의 도래?

10면

통상임금 Q & A

8~9면

남아공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

12면

ISSN 2005-8217



누구의 말일까요?

“이라크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체제 안에서 활동했고 [러시아와 달리] 이라크 영토와 자원을 차지하지도 않았다.”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를 비난하며 오바마가 한 헛소리

“과거사를 겸허한 자세로 대하고 다음 세대에 역사의 교훈과 사실을 전하겠다.”

안네 프랑크의 집에 방문한 일본 총리 아베의 거짓말

“카타르의 노동법까지 관여할 수 없다.”

FFA, 지난 몇 년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1천2백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는 보고서에 관해

“납득은 안 되겠지만 구형이나 선고 과정에서 검토할 사정들이 있었을 것”

황교안의 허재호 ‘황제 노역’ 옹호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4·19, 5·18을 들어냈다.”

새정치연합 대변인 금태섭

“공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과오에 대해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온 국민에게 박정희라는 우리 시대의 한 지도자에 대한 당당함을 보호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예비후보 김부겸

“아버지는 그곳[독일]에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슬픈 눈으로 바라봤고, 딸은 통일된 조국의 밝은 미래를 꿈꿨다.”

〈국민일보〉, 오글거림은 독자의 몫?

“강정마을 주민 등이 물어야 할 벌금 3억 원은 [해[재]호] 전 회장이 교도소 노역장에서 반나절만 소포백에 풀칠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만약 법원이 허 전 회장처럼 강정마을 주민에게도 노역장 일당을 5억 원으로 책정해 주면 강정마을 벌금폭탄 문제도 단박에 해결될 텐데...”

〈한겨레〉 칼럼

“동성애는 믿음의 아픔입니다. 제 영혼은 힘들지 않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포용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안아 주는 건? 좋아요.”

최근 커밍아웃을 한 할리우드 여배우 엘렌 페이지, 동성애 비하 목사에게 놓은 일침

거리와 대학에서
노동자연대를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주 가판은 4월 14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대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오아시스빌딩 앞) 19:30~20:3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12:00~13:00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앞 12:00~13:00

격주 화요일 (다음주 가판은 4월 15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19:00~20:00
고려대 정경대 후문 16:30~17:30

격주 수요일 (다음주 가판은 4월 16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12:00~13:0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입구 12:00~13:00
부산대(부산) 낙타광장 17:30~18:30

격주 목요일 (다음주 가판은 4월 17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인하대 학생회관 앞 12:30~13:30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17:30~18:30

격주 금요일 (다음주 가판은 4월 18일)

인천대 컨벤션센터 1층 12:30~13:30

발행인 : 김원식 편집인 : 김원식 인쇄인 :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쌍용차 ‘살인해고’ 책임자에겐 솜방망이, 김정우 전 지부장에겐 철퇴 내리려는 검찰

3월 18일 검찰이 대량 해고 과정에 자행된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해 쌍용차 전·현직 사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살인해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앞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대량 해고의 근거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회계 조작도 인정한 것이다.

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꼴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수사를 차일피일 미뤘 왔다.

그래 놓고 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오히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실수사’를 넘어 “사측의 편을 들어 준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패소한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쌍용차지부장 양형근 정책실장). 또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하는 경총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다 회계조작 의혹은 오히려 꼬리를 몰며 불거지고 있다. 대량 해고의 근거가 된 2008년 회계자료만이 아니라 이후 금감원과 법원



한국의 지배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쌍용차 노동자들을 끝까지 괴롭히려 한다.

에 제출된 ‘감사조서’도 적어도 3차례 넘게 번조됐다는 것이다. “2천6백46명의 대량해고와 24명을 죽음으로 내 몬 ‘5천1백77억 원’이란 숫자를 맞추려다 보니 연이은 회계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보복

사측에게 이토록 관대한 검찰은 4월에 형기만료를 앞둔 쌍용차 김정우 전 지부장에겐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에 항의한 것을 근거로 삼지만, 지

난해 말 법원은 오히려 대한문 집회를 금지 처분한 경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이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독한 보복일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참배하려는 박근혜를 막아서며 ‘위선’을 폭로한 것이 김정우 전 지부장 이었다.

검찰의 뻔뻔한 행태는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제엠네스티가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위해 단체 행동을 조직할 때

3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노동부 측은 전교조가 1999년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을 당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설립신고 당시 하자가 있었다면 사후 설립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했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임 없이 제정된 위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반박을 할 수 없었는지 전교조 설립 당시 규약까지 트집 잡아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 측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전교조는 설립 당시 최초 규약 원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전교조는 “설립신고 당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고 이후 규약을 바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최근의 노동계급과의 대결 속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주노총의 주력 가운데 하나인 전교조를 설립 취소하려고 한다. 어떻게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무늬만 정규직인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고 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강행하는 교육 공격에 맞서는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3월 27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낸 것은 노동 3권에 이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손발을 묶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법외노조 인정 판결이 나면 전체 세력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박근혜가 자본가 계급을 위한 규제 개혁과 임금 체제 개편을 전면적으로 들고 나와 사실상 노동계급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말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70퍼센트가량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기로 결정해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 다른 부문 노동계급에도 자신감을 준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법외노조 여부 판결을 단지 재판부의 결정에만 맡겨 둘 수 없고 전교조만의 사안으로 국한해서 볼 수 없는 이유다.

대결

지난 2월 2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41명이 법외노조 저지 투쟁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을 냈고, 전교조 집행부는 이를 수용해 “상반기 내에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조합원 전체 수준에서 참가하는 단체 행동을 배치해 노동자들과 광범한 진보 대중에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협 상황을 정치적으로 환기시키고 조합원들을 결속시킨다”는

문구로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제는 이 사업 계획을 분명하게 집행해야 할 때다. 다음 달 29일 오후 2시로 최종 심리가 정해졌으니 더욱 그렇다. 재판부는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에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가 함께 벌이는 공공부문 공동 투쟁에 주요 요구로 ‘법외노조 조치 철회’가 포함됐다.

때마침 4월 1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공공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를 법외노조 철폐 투쟁 전선을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5월 17일로 예정된 전국교사대회도 법외노조 조치 철폐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규모 있게 대회를 성사시켜야 한다. 이런 저항의 움직임이 1심 판결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대현

함께 참가합시다!

민생파탄! 민주파괴! 박근혜 정권 심판!
419범국민대회

일시 : 2014년 4월 19일 (토) 오전 11시
장소 : 서울 도심 (전국집중)
주최 : 사국대회위원회

서점에서
노동자연대를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반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노동자연대 안드로이드 앱

새 온라인 기사와 신문이 나오면 알려 드립니다.
최신 기사를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oo.gl/evF3xg>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 포럼에 초대합니다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지구
우파의 강세, 파시즘의 성장 —
우리는 우경화 하고 있는가?

연사 : 차승일(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 4월 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 3,500원(학생 2,500원)
문의 : 010-9840-1236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지구
보건의로 노동자에게 듣는다 —
우리의 삶을 망칠 의료 민영화와 그에 맞선 투쟁

연사 : 김숙영(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일시 : 4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장(한국여성노동자회)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서교동 방향으로 50미터 직진, 한국스탠다드치타드은행 뒤편 조선화로구이 골목
참가비 : 3,000원(학생 - 청소년 2,000원)
문의 : 010-9112-3670(문자도 환영)

주최 | **노동자연대**
(<http://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하는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연사 : 김문성(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 4월 2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사범대 신관 B102
참가비 : 2,000원
연락 : 010-5678-8630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3월 20일 박근혜가 직접 주재한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이 장장 4시간 동안 방송사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 “처부쇠야 할 원수”라고 비난해 온 박근혜는 이번에는 규제를 “도둑질”, “죄악”이라고 지칭하며,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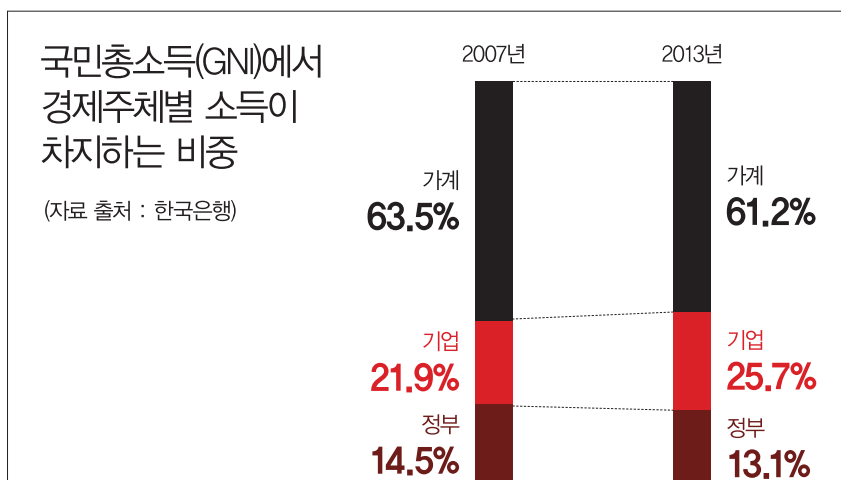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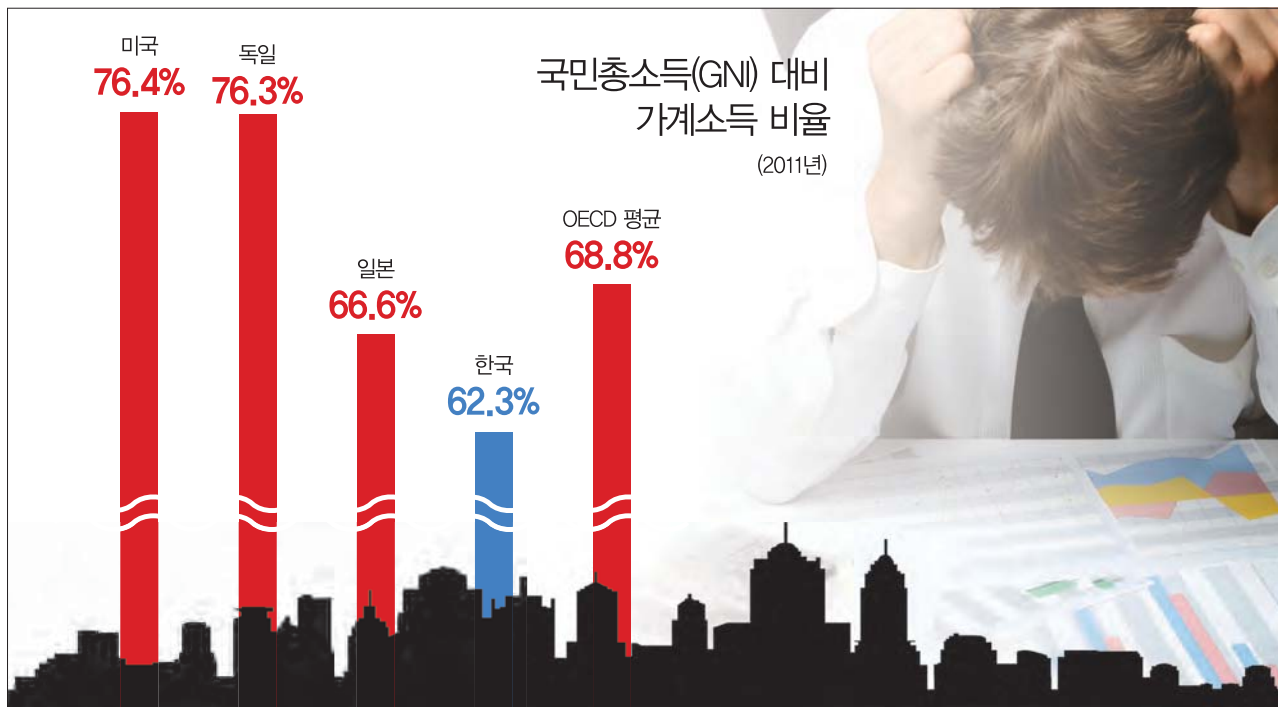
청와대에서 한바탕 쇼가 벌어지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까지 나서 ‘규제 개혁 추진단’ 등을 만들며 박근혜를 거들기 시작했다. ‘끝장 토론’ 일주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끝장 토론’에서 언급된 규제 52건 중 41건을 올해 안에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완화하겠다는 41건의 규제를 살펴보면, 노골적인 대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 트럭’으로 바꾸는 것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말이다.

41건 중 9건이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의료 민영화 관련 사항이다. ‘학교 주변 호텔 건설 허용’은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 건설을 추진해 온 대한항공의 숙원을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회사들이,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허용’은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천NCC 같은 정유·화학회사들이 거둬 요구해 온 사안이다.

또, 박근혜 정부는 ‘불산 누출 사고’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만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이를 풀어 주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서서히 도입하겠다고 했고, 5인 미만 기업에서도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 도입을 허용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박근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확실하게 내팽개치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개혁’을 내세우며 확실하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실패한 정책

박근혜가 이처럼 규제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세계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여파로 신흥국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몇몇 중견기업들이 부도를

내면서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박근혜는 ‘끝장 토론’에서 “우리 경제가 대도약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현오석도 “현재 많은 나라들이 경제 회복세를 성장 잠재력 제고로 굳히려는 데 중점을 두고 뛰고 있는데 우리에게 규제 개혁은 그런 측면에서 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규제 철폐→기업 투자 확대→경

제 성장→낙수 효과, 일자리 증대’라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에 따라 경제 위기에 대처하려고 규제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전봇대 뽑기’를 추진했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을 면치 못했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수익성이 높지 않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박근혜가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분 제한 규정이 최근 풀렸다. 이 법의 개정 목적은 GS와 SK 같은 재벌들이 외국 석유회사들과 함께 투자해 계열사를 추가로 만드는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GS특혜법’, ‘SK특혜법’이라고까지 불렸다. 그러나 GS칼텍스는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 침체 등으로 정유업계의 수익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국내총투자율

은 27.5퍼센트로 전년 29.5퍼센트보다 2.0퍼센트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축을 하는 쪽으로 쏠렸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4퍼센트대였던 기업저축률은 2008년 경제 위기 후부터는 10퍼센트대 후반을 기록 중이다. 2011년에 19.3퍼센트, 2012년에 18.7퍼센트였다.

반면 노동자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 몫은 2007년 63.5퍼센트에서 지난해 61.2퍼센트로 감소했다. 독일·미국·영국·프랑스가 모두 70퍼센트대이고, 2011년 기준 OECD 평균이 68.8퍼센트인 것에 견주면 훨씬 낮은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 가계 몫은 21.9퍼센트에서 25.7퍼센트로 증가했다.

반발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답게 박근혜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을 후원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신자유주의적 규제 개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적 규제 개혁이 박근혜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 개혁을 두고 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하고, ‘푸드트럭’ 허용도 기존 음식점 자영업자들이나 노점상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게다가 철도파업 등에서 드러났듯이 조급석 회복되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대중적 반감의 초점 구실을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드라이브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지배자들 내에서 갈등이 격화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노동자 투쟁에 자신감을 높여 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통상임금 공격,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신자유주의 규제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발전시킬 때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자

박근혜는 지난 2월 25일 애초 담화문에 빠져 있던 공무원연금을 포함시키며 연금개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줬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연금 개악 전 ‘명예퇴직’을 고민할 정도다.

공무원들은 불안감과 함께 정부의 개악 의지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높다. 공무원노조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0퍼센트가 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과 연가파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적극 참가하겠다는 노동자들도 60퍼센트가 넘었다. 2004년 연가파업으로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지금도 파업권이 없는 공무원 노동자들 안에서 파업 참가 의사 비율이 60퍼센트를 넘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꿈수

한편, 박근혜가 담화문을 통해 연금 개악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손질(개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며 뒤로 미룰 것처럼 얘기

하고 있다. 아마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철밥통’ 논리를 내세우며 공무원 노동자들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을 획책하며 차근차근 공무원연금 개악을 준비할 것 같다.

최근 정부는 훈령을 개정해 연금법개정 과정에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연금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앉히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확실하게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지 못한 게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들을 참여시킨 논의기구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결국 정부는 훈령 개정으로 공무원노조와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본격적인 연금 개악에 시동을 건 정부에 맞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많은 조합원들은 정부의 개악 의지에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조합원들의 정서를 단결된 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정부와 언론의 공무원연금 개악 선동에 맞서 효과적인 반박을 해야 한다. 특

히, 정부의 ‘철밥통’ 논리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공무원연금 개악뿐 아니라 기초·국민연금 개악도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들끼리 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대안으로 내놔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줄이라고’ 요구하자 공공운수노조·연맹이 “대부분의 기관은 공무원 평균보다 낮게 받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자칫 정부의 화살이 공무원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열 책동에 맞서려면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해 더 높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분열 책동

정부의 분열 책동은 비단 공무원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 안에서도 신규자와 재직자 사이에 분열 시도를 해 왔다.

2009년 연금 개악 당시에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분열 책동에 타협해 신규자와 재직자 간에 개악의 폭을 달리 적용했다. 당시 개악안은 20년 이상 재

직자는 5.82퍼센트 삭감, 신규임용자는 22.7퍼센트 삭감이었다. 당시 법 개정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개악론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조차 “이 개악안으로] 한 직종 내 공무원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1년 먼저 들어왔다고 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1년 늦게 들어왔다고 연금을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하고 불평했다.

이제 정부는 신규자와 재직자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이제 재직자도 신규자만큼 연금수령액을 낮춰라’ 하고 요구한다.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진정한 목표는 ‘평준화’가 아니라 공무원연금 전체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특히 재직자의 연금 수준을 대폭 낮추지 않으면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때문에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했다. 신규자 수준이 아니라 평균수급액이 30만 원에 지나지 않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당시에도 이런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후퇴를 막으려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삭감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편, 일부 활동가들은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가운데 소수가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면서도, 이들의 연금수령액을 낮춰 차이를 해소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을 둘러싼 차이를 강조하면 의도치 않게 정부의 하향평준화 시도에 말려들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간질과 분열 책동에 맞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연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 개악에 맞서려면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과 연대보다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연금 개악에 맞선 “사회적 연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강력한 대중행동을 보여 줘야 사회적 연대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맞서 파업했을 때처럼 말이다.

박근혜가 연금 개악의 발목을 드러낸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조합원들의 불만과 분노를 모아 내야 한다. 또, 정부의 이간질에 속지 말고 더 넓게 단결할 수 있는 요구를 내세워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자.

박천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철도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강제전출 중단하라

이정원

철도공사는 4월 초 대량 강제전출을 강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만 무려 1천여 명이 대상이고, 이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강제전출이 “가정과 생활을 파괴하는 비인간적 짓”이라며 크게 분개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교번제 근무, 교대제 근무 등으로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적인데다 휴일근무도 잦다.

그런데 강제전출로 연고도 없는 낯선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갑절 넘게 늘어나 생활이 망가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생활 조건과 근무 환경 등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K.T다. KT의 상시적인 강제전출 프로그램은 해마다 노동자 수십 명씩 돌연사, 각종 질환, 자살 등의 죽음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큰일인데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달랑 문자 하나로 전출대상을 통보받으면 배신감과 억울함”에 치를 떠는 것이 당연하다.

강제전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한 노동자는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내가 왜 퇴출 대상인가. 한평생 철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온 나와 직장동료에게 왜 ‘무능’ 딱지를 붙였는지 밝혀라!”, “쌍용차 노동자



안전은 뒷전, 민영화와 보복엔 혈안인 철도공사 3월 24일 '강제전출·노조탄압 규탄 철도노조 결의대회'.

들이 정리하고 문자를 받았을 때 심정을 알겠다” 하고 말한다.

길닫기

철도공사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방만한 개선을 위해 강제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 현장은 방만하기는커녕 극도의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제전출은 숙련 노동자를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 기존에 쌓은 숙련도를 소용

없게 만들고 철도 안전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20년차 기관사 한 명은 “내가 운행하는 노선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다른 지역, 노선으로 보내면 1년차 부기관사만큼도 잘 해낼 수 없다” 하고 말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지적하듯이, 강제전출은 또한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 지부에서 동료들과 맺은 관계를 파괴해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관

리자들 눈 밖에 나면 날려 버린다’는 위협으로 인원 배치의 칼자루를 사족이 쥐겠다는 것이다.

사족이 계획대로 6개월에 한 번씩 대규모 강제전출을 한다면 현장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강력히 저항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규모 강제전출은 또한 지난해 파업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앞으로 계속될 분할 민영화를 위한 길닫기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때문에 박근혜와

지배자들은 공공부문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다.

특히, 올해 추진할 예정인 물류 분리는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떼어내 자회사로 보내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자들이 격렬히 반발할 일이므로 지배자들은 노조의 조직력을 최대한 약화시킨 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 민영화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강제전출을 막아내는 것은 이후 투쟁을 대비하는 데도 중요하다.

강제전출 저지를 위해 철도 노동자들이 다시 반격에 나서다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해 파업 이후 2월 25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인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파업에 돌입하려 한다. 철도노조는 3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강제전출에 맞서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파업부터 불과 몇 달 새 세 번째 파업에 나설 만큼 정부의 공격이 집요한데다 노동자들 역시 호락호락하게 굴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간의 파업이 끝나자 1백30명 해고 등 4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에 대한 중징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노조 기금 가압류 등 파업에 대한 보복이 이어졌다.

몇몇 지부들이 사족의 구조조정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밀리지 않고 버티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2월 25일 민주노총의 하루 파업에 동참하며 사족의 공세에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 기간에 벌어진 전투와 반격 덕분에 철도공사는 본격적인 공세를 펴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철도공사 역시 이 정도 반격에 물러설 요량이 아니다. 박근혜는 취임 1년 연설에서 특별히 철도를 언급하며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정부는 철도를 ‘갈등 관리가 미흡한 공기업으로 지명하고 연일 두들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강력한 공세의 신호였다.

노조의 반격이 하루 파업 정도로 그치지자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벌이던 ‘선봉’ 지부들이 점차 고립되고 지치는 기색이 역력해졌다. 3월 중순, 확대되는 구조조정에도 저항이 확대되거나 전체적인 투쟁으로 모아지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한 사족은 강제전출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제전출은 광범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분노를 사는 중요한 사안이다. 1천여 명에 이르는 조유의 대규모 강제전출인데다, 노동자들 개개인에게는 하루 아침에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이 뒤흔들리는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호

특히 기관사와 차량 노동자들이 전출 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도 강력한 반발을 낳은 요인이다. 철도에서 가장 숙련된 기관사들과 ‘마스터급’ 차량 노동자들이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로 전출 대상으로 대거 뽑힌 것이다. 이들이 신규 발령지에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초짜’ 취급을 받는 처지로 ‘강등’되는 일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노동자들은 강제전출이 일부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를 겨냥한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였고, 강제전출 후보자 명단이 드러나자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1만 1천 명을 강제로 분할 자회사로 ‘전직’ 시키고 거부하면 해고시키는 정부 방안까지 폭로돼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우기도 했다.

다시 사족의 공격이 전면화하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의 태세도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반갑게도 현장의 투쟁적인 지부장들은 신속하게 투쟁 태세를 다시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그 포문은 지난해 파업의 핵심 주도 세력인 기관사들이 열었다. 전국 운전(기관사) 지부장 회의를 열어 기

관사 직종 파업을 결의했고, 그 뒤를 차량 직종이 이어받아 기관사들과 함께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그리고 서울지방본부도 파업을 결의했다.

기관사 지부들에서 연일 현장 조합원들의 ‘삭발 행렬’이 이어졌고 며칠 만에 전국에서 수백 명이 동참하며 투쟁 열기가 확대됐다. 한 기관사 지부에서는 “조합원들이 이번처럼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온 적은 처음”이라며 조합원들의 만만찮은 투지를 설명했다. 몇몇 지부들에서 전면파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지금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직종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열차승무 지부장들도 휴일 근무 거부 등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해 수위를 높여 ‘운전, 차량 직종과 연계해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에서 시설 지부장들의 결의도 이어졌다.

이처럼 뜨거운 현장의 분위기와 가장 강력하고 잘 조직된 부문이 파업을 결의한 것은 노조 중앙에게 투쟁을 적극 조직하라는 강력한 촉구였다.

반격

2월 25일 하루 파업 이후 사족에게 다소 밀리던 역관계에 다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록 ‘속 빈 강정’이지만 국회 철도 소위원회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강제전출 규모를 줄여보자’는 말이라도 꺼내며 중재에 나설 뜻을 비쳤다.

이것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철

도 파업이라는 ‘악몽’이 다시 현실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노조의 파업 돌입 예고 후 철도공사는 강제전출 시행을 4월 초로 예고하면서 “직렬별 정원 대비 5~10퍼센트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원대비 3퍼센트인 8백50명 수준”으로 하고 “기관사는 1백3명, 차량직은 1백63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사와 차량 노동자들의 강제전출 비중을 예상보다 낮춰 달래 보려는 의도다.

따라서 지금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해 강제전출을 철회시키고자 강력하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기관사, 차량 직종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는 것뿐 아니라 다른 직종과 지부들의 파업 동참이 중요한 이유다.

공사 측이 4월 초로 시행 시기를 못 박은 만큼, **시행 전에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야 강제전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유와 협박에 휘둘러 강제전출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강제전출 대상자든 아니든 함께 단결해 싸울 수 있다.

이 때문에든 모두가 함께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누구는 파업에 참가하고 누구는 필수 인력으로 현장에 남으면, 남은 노동자 중 강제전출 대상자는 집중적인 회유와 협박의 대상이 돼, 발령을 거부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또, 모두 함께 파업에 들어가면 사족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박근혜는 막무가내로 신자유주의 폭주 열차를 몰고 있지만,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건에 이어 청와대의 채동욱 ‘뱃조사’ 정황도 드러나 곧

혹스러운 처지다.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도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예고하는 등 5월 노동절 대규모 집회로 가는 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도 이어질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해 파업에 나선다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

연대

철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다시 한 번 투지를 다지며 파업을 결의하자 지지와 연대도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 중앙위원회에서 철도노조 “업호 투쟁”의 일환으로 철도노조가 손해·가압류 분쇄를 위해 발행한 투쟁채권을 구입하기로 조직적으로 결의했고, 노조탄압과 강제전출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전 조직이 주요 투쟁일정에 결합하기로 결의했다.

또, KTX민영화저지범대위와 각 지역대책위들은 철도노조 파업 지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강제전출 중단과 파업 지지를 위한 ‘원탁회의’도 소집됐다.

지난해 철도 파업이 강성 우파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지를 보여 줬 광범한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다시 철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선다면 이번에도 지지와 연대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반격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에 맞선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극하고 의로 민영화 저지 운동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측의 징계와 현장 통제에 맞선 전주공장위원회 쟁의 결의

투쟁을 전 공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가 3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를 구성했다. 본지 122호가 보도했던 것처럼 전주공장위원회는 현대차 사측의 징계와 현장 통제에 맞서 특근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동안 벌이던 특근 거부 투쟁에 더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잔업 거부까지 결정한 것이다.

전주공장위원회 서성민 기획부장은 3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는 사측의 무차별적인 현장 탄압과 도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뿐 아니라 현직 대의원들에게도 고소·고발과 손배 등 각종 협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사측은 기존 합의를 위반하고, 심지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관리자들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탄압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공장위원회는 현장 탄압 분쇄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은 현장 탄압 분쇄대책위 구성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수정동의안으로 쟁의 행위 결의와 쟁의대책위 구성안이 올라왔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징계와 현장 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최근 전주 공장은 라인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을 빌미로 대의원을 해고하고, ‘기조 질서 지키기’라는 명분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이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벌어져도 생산 라인을 돌리는 데 혈안이 돼,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전주 공장 노동자들이 특근 거부뿐 아니라 쟁의를 결의하고 잔업 거부를 결정한 데에는 사측의 현장 통제 강화와 징계에 대한 분노가 컸다.

전주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대차 다른 공장 활동가들에게도 자극과 희망을 주고 있다. 현대차 사측이 전주 공장뿐 아니라 울산 등 다른 곳에서도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손체조

현재 현대차 사측의 징계와 현장 통제 강화는 전주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울산 공장에서도 ‘기조 질서 지키기’라는 명분으로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단결이야말로 노동자의 무기 울산 공장이 전주 공장과 함께 싸우는 것이 양쪽 노동자들 모두에게 유리하다. 3월 26일 울산 공장 본관 앞 집회.

사측은 “조기 퇴근”, “작업 중 인터넷과 신문 읽기” 등을 근절하자며, 조합원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식사 시간 지키기”라는 미명하에 식사 시간 전에 줄 서는 것을 관리자들이 체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측은 2조(오후조) 노동자들의 “조기 퇴근”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주간연속 2교대가 도입돼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긴 노동시간 때문에

좀 더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한다. 그래 봐야 자정에 퇴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 중 인터넷과 신문을 읽는 것은, 고되고 단조로운 노동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식사 시간도 40분으로 줄었는데, 조금 일찍 줄 서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이지 치졸한 짓이다.

최근 현대차 사측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다고 작업 전에 체조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면 노동강도를 낮추고 틈틈이 휴식하며 몸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

그러나 사측이 공장 곳곳에서 UPH(시간당 생산 대수)를 높여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누렸던 휴식 시간을 공격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완전 헛소리다. 체조 공문은 사실상 조기 출근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차 엘리베라 공장처럼 15분 일찍 출근해 “간단한 인수인계 사항과 휴가 일정 등을 전달받고, 맨손체조로 몸을 풀게” 만들려 하는 것이다.

울산 공장에서도 ‘기조질서 지키기’뿐 아

니라 징계와 해고도 중요한 문제다. 1공장 현직 대의원 엄길정·박성락 동지가 해고됐고, 3공장의 박상호 조합원도 해고됐다.

울산 공장에서도 사측의 징계와 현장 통제 강화에 대한 불만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3월 26일 열린 울산 공장 본관 앞 집회에는 집회 공지 하루 만에 6백여 명이 참가해 활동가들의 반감과 경각심을 보여 줬다.

울산 공장에서도 징계와 현장 통제 강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공장위원회의 투쟁을 울산 공장으로도 확산해야 한다. 이는 사측의 현장 통제 강화와 징계를 좌절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통상임금

아울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장 통제와 징계에 맞선 투쟁은 다른 투쟁과도 연관이 있다.

올해 현대차는 임금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 속에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은 통상임금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여철은 이중임금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2013년 3월 이후 입사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이

중임금제의 초석을 놓았는데, 이중임금제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2016년 도입하기로 합의한 ‘8/8 근무제’*를 둘러싼 투쟁도 중요한 과제다.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과 8/8 도입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장 곳곳에서 시간당 생산 대수를 높여려 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노동시간 단축이 국회를 통과해도 2년을 유예할 수 있다고 했고, 경총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6년 8/8 근무 도입도 만만치 않은 쟁점이 될 것이다.

최근 사측의 현장 통제 강화와 징계 남발은 이런 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예봉을 꺾고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 통제 강화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기 위한 방안이다. 세계경제 위기, 특히 최근 신흥시장의 출렁거림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 속에서 현대차 사측이 취하는 전략이다.

일부 활동가들이 “어차피 매년 임단투를 앞두고 사측이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 했으니 소나기를 피해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투쟁의 확대

따라서 전주 공장의 투쟁을 현대차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 전주공장위원회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한 만큼, 현대차지부 전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울 임금협상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가 예정돼 있다. 임시대의원대회를 당겨서 개최해 요구안을 확정하는 것뿐 아니라, 현대차지부 전체가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대위를 구성해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매해 하던 패턴대로 임단협 투쟁을 하기에는 사측의 공세와 태도가 만만치 않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지부 신문과 소식지에서 사측의 현장 탄압과 징계를 비판하고 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조직해야 할 때다.

현대차 투사들과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부 집행부에게 투쟁하라고 요구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작업장에서 선동하고 현장 통제에 맞서 싸우고, 이를 전 공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허수영

현대차 울산 4공장 UPH-UP 반대 투쟁

(시간당 생산 대수)

사측이 32UPH(시간당 생산 대수)를 39UPH로 올려 우리를 더 쥐어짜려고 안달이 났다. 이미 사측은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면서 2UPH를 올렸다. 이것도 모자라 또 7UPH나 올리겠다는 등골 빼먹으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야금야금 UPH를 올리다 보면 8/8 근무제 도입 때 또 UPH-UP을 하자고 할 것이다.

더구나 UPH-UP은 통상임금 손실 최소화, 8/8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술책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 공장 곳곳에서 UPH-UP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사측은 생산량이 좀 늘어나면 UPH-UP을 했다가, 생산량이 줄어들면 UPH를 낮추고 비정규직



UPH가 오르면 노동자는 두 눈 뜨고 도둑질 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동지들을 해고하거나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잔업·특근을

줄여 정규직의 임금도 삭감해 버리기 일쑤였다.

4공장 노동자들이 UPH-UP을 거부하자, 사측은 다섯 차례나 담화문을 내서 협박과 핑계를 부리고 있다. UPH-UP을 성공시키지 못한 4공장장이 최근 해임되기도 했다.

특히 사측은 매년 그랬던 것처럼 ‘물량 이관’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량 이관은 현실성이 없다. 당장 사측은 4공장만이 아니라 2공장, 5공장 등 곳곳에서 UPH-UP을 시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물량을 이관한다는 것인가?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넘기려 한다면, 막대한 투자비용 때문이라도 큰 부담이 있을 것이다.

사측은 우리의 불만을 달래 보려고 ‘물

량이 부족해질 경우의 대책을 만들겠다’고도 말했지만, 지금도 물량 갖고 장난치는 저들이 나중이라고 달라지겠는가?

지금 4공장 대의원회는 UPH-UP을 반대하고 있다. 사측의 UPH-UP 경영 설명회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대의원회 일각에서 최근 경영 설명회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장라인의 대의원들은 1UPH도 올릴 수 없다는 올바른고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

4공장 대의원회는 흔들리지 말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정동석 현대차 4공장 차체·프레스 현장위원 의장

3월 22일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수만 명이 파시즘과 인종 차별에 맞서 행진하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전 세계 대도시 20여 곳에서 벌어진 시위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고, 다채로웠다.

가장 가시적인 시위는 그리스에서 열렸다. 노동조합원과 이주민 수만 명이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살로니카·차니아 등 주요 도시들에서 주목할 만한 행진을 벌이며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마녀사냥에 반대했다.

시위대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를 진족 반대와 연결시켰다. 시위대는 정부가 이주민 캠프를 폐쇄하고 이주민 자녀들에게 시민권과 선거권을 주기 위한 예산을 핑계로 진족을 정당화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물 민영화 반대 운동도 이날 행진에 함께했다.

노동자들이 대열의 주축을 이뤘다. 언론노동조합(POSPERT), 공무원노동연맹(ADEDY) 소속 노동자들을 비롯해 병원 노동자, 통신 노동자, 교사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우크라이나 이주민 단체들도 함께 행진했다. 본지가 지난 호에 보도한 것처럼, 교사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했던 학생 단체들도 대열의 중요한 일부를 이뤘다.

뜻깊게도,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과 이들을 비호하는 정부에 희생된 사람들도 행진에 참가했다. 사용자들에게 충격을 당한 이후 투쟁을 벌이는 파키스탄계 농업 노동자들, 황금새벽당 당원들에게 살해당한 세자드 루크만의 유가족은 “황금새벽당에 한 표라도 찍는 것은 나치의 손에 칼을 들려 주는 것이다! 그리스 의회든, 유럽연합(EU) 의회든, 지방자치단체든 마찬가지다!” 하고 외쳤다.

이 행진은 황금새벽당에 맞서는 중요한 도전이었다. 최근 반파시즘 운동에 밀린 정부는 황금새벽당 소속 의원 두 명의 면책특권을 박탈했고, 이 의원들은 제 앞가림이라도 하고자 의원직을 사임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 고무된 그리스 민중이 또 한 번 세력을 과시한 것이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일어서라” 3월 22일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시위.

반파시즘연합(UAF)과 영국노총(TUC)이 공동 주최하고 모든 주요 노조들이 후원한 영국 시위도 힘차게 진행됐다. 런던·글래스고·카디프 등 영국 주요 도시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동은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노동조합원들과 반파시즘 활동가들뿐 아니라 루마니아·불가리아·폴란드·로마(집시)·쿠르드계 이주민 단체들과 무슬림·기독교인 등 다양한 종교 단체들이 이날 행동에 함께했다.

참가자들의 목소리도 힘찼다. 시위를 지지한 노동당 하원의원 다이앤 애벗은

“이주민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착취가 저임금의 원인”이라며 “[정부는 이주민들 때문에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위협하다지만] 이주민들이 없었다면 NHS도 없었을 것”이라고 연설해 이주노동자들이 진족에 책임이 있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TUC 위원장 무함마드 타즈는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노동자들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민의 자유가 없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민의 자유를 옹호했다.

이민의 자유

시위대는 파시스트 정당인 영국국민당(BNP)뿐 아니라 보수당의 부진을 딛고 성장세를 보이는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독립당(Ukip)에 맞서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연사들은 “모든 정당들은 인종차별, 파시즘, 이민 반대 정치를 규탄해야 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5월 [EU 의회] 선거에서 진흙탕 정치를 원치 않는다”며 인종차별적 정당들을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를 주도적으로 건설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 주디스 오어 역시 Ukip의 인종차별적 선동에 영합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등의 정치인들을 규탄하며, “누가 이주민들을 더 잘 천대하는지를 두고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이날 행동에 즈음해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가 포함된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여러 단체에서 50여 명이 이 자리에 참가해 “인종차별 반대, 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에 연대를 표하고 전국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공동소집자)이라며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뉴욕, 파리, 코펜하겐, 바르셀로나, 로마, 상파울루 등 다른 여러 대도시에서 벌어진 이날 공동행동은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과 극우·파시즘에 맞선 중요한 도전이 됐다. 이미 그리스에서는 4월 10일과 30일을 기해 후속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전이 전 세계에서 계속돼야 한다.

김준호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큰 성공을 거둔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 건설이 시급하다

3월 23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마린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FN)의 대성공이다.

프랑스 내무부의 1차 투표 예비 집계 결과를 보면 FN은 4.7퍼센트를 득표했다. 2012년 대선 때 FN이 17.9퍼센트를 득표한 것에 견주면 4.7퍼센트의 득표율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FN이 2008년 지방선거에서 0.9퍼센트를 득표한 것에 견주면 엄청난 성장이다. FN이 전체 선거구 3만 6천 곳 가운데 5백96곳에만 후보를 냈다는 점도 염두에 뒀야 한다.

FN의 한 후보는 한때 사회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북부 공업 도시 에낭 보몽에서 절반 이상을 득표해 시장으로 확정됐다. FN은 아비뇽, 페르피냥, 베지에 같은 중소도시 예닐곱 곳에서도 선두를 차지했다. FN은 1995년 선거에서 시장 네명을 배출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이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1차 투표 결과 FN은 이미 지방의원 4백73석을 확보했고, 2백 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결선 투표(3월 30일)에 진출해 3백 석 정도를 더 확보할 듯하다. FN은

2012년 대선에서 약진한 후 지난해 브리뇰 보궐선거에서도 승리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FN은 여세를 몰아 5월에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이런 선거적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거리 운동을 건설하려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수혜를 입은 또 다른 곳은 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이하 UMP)이다. UMP는 1차 투표에서 46.5퍼센트를 득표해 37.7퍼센트를 득표한 사회당(이하 PS)을 크게 앞섰다. UMP는 2008년에 PS에 빼앗긴 몇몇 중요한 도시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직선제가 아니라 시의원이 간선제로 선출하는 프랑스의 선거 제도 덕분에 PS는 파리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1차 투표에서 PS의 후보 안 이달고는 UMP의 후보 나탈리 코슈스코 모리제에게 패배했다. 그 밖에도 PS의 성적은 예상보다 나쁘다.

PS의 올랑드는 2012년 대선에서 강력한 반진족 정서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었다. 올랑드는 부유세 도입 등 진보적 사회 개혁을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위

기 심화로 대중의 삶이 악화하는 가운데 진족을 추진했다. 대표 사례가 올해 1월에 제안한 ‘책임 협약’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주들은 2017년까지 사회보장 부담금을 자그마치 3백억 유로(약 44조 2천억 원)나 감면받는다. 책임 협약에는 복지비 지출을 2백억 유로(약 29조 4천억 원) 삭감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래서 올랑드는 집권 2년도 안 돼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그동안 대중의 염원을 배신해 온 PS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다.

배신

PS 정부의 배신에 항의하는 시위나 파업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우리의” 대통령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을 꺼려 왔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했던 프랑스 노동자 운동이 2010년 크게 분출한 이후로는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아쉽게도 PS 정부에 대한 만만찮은 도전은 주로 오른쪽에서 왔다. 예를 들어, 우파들은 올해 1~2월에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여성 동성애자 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지원책 등이 담긴 가족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시위였다. PS 정부는 이 우파 시위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다.

한편, 2012년 대선에서 거의 4백만 표를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좌파전선은 이번 선거에서 분열하며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좌파전선 내 최대 조직인 공산당(PCF)은 몇몇 지역에서 PS와 연합했다가 동반 몰락했다. 좌파전선 내 다른 조직들은 반자본주의신당(NPA) 같은 극좌파 정당과 동맹을 맺었다.

PS는 결선 투표에서 국민전선의 승리를 저지하자며 UMP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생질에서는 결선 투표에서 UMP와 FN이 맞붙도록 PS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UMP는 PS와의 제휴를 거절했다.

FN은 파시스트 정당이다. 파시스트가 몇몇 나라에서 집권했던 20세기 초 역사를 보건대, FN이 더 성장해 집권한다면 민주주의 일체를 분쇄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FN의 성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생질 사태에서 보았듯이, UMP 같은 우파와 손잡는 것은 결코 바

람직하지 않다. UMP는 우파를 결집시키려 하며 인종차별적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는데, 이런 UMP와 동맹을 맺는 것은 인종차별적 사상의 영향력만 키워줄 것이다. 그리고 주류 정치권이 강화해 온 인종차별 정서는 FN이 성장하는 좋은 토양이 됐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FN의 약점도 일부 드러났다. 후보자 선발에 애를 먹은 것이다. 예컨대, 한 곳에서는 FN이 후보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후보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아직 지역사회에 내린 뿌리가 깊지는 않은 듯하다. 좌파는 FN의 이런 약점을 활용해 반파시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로마인 학생 추방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운동, 반파시즘 활동가 클레망 메리크가 파시스트에게 살해당한 후 일어난 대규모 반파시즘 시위, 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 등을 보면, 프랑스에서 반파시즘 운동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FN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보면,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의 건설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차승일

1월 26일 우파 2만 명이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에 반대하며 파리 시내를 행진했다. 자신들의 시위를 ‘분노의 날’이라 부르며 국방비 삭감, 범죄 증가, 높은 세금, “가족 파괴”[동성 결혼 합법화] 등을 놓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런 정적 이슈 외에도 이날 행진에서 눈에 띈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유대인 배척을 표출한 대열이었다. 이 ‘분노의 날’ 시위는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이 날은 프랑스에서 ‘쇼아’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재앙이라는 뜻이다)을 하루 앞두고 벌어졌다.

행진 대열 중 2백 명에 달하는 파시스트 무리는 “쇼아! 쇼아! 하하하!” 하고 외쳤다. 또, 어떤 자들은 프랑스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자로 악명 높은 로베르 파우리송을 예찬했다. “파우리송이 옳다! 가스실은 전혀 없었다!” 유대인 배척 ‘개그맨’ 디유도네가 퍼뜨린 하향 파시스트 경례*를 하는 자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는 당일 행진 지도부와 무관한 일부 개인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다. 이민자 적대와 무슬림 혐오로 가득한 이날의 우파 행진 속에서 골수 파시스트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한 행동이었다.

극우 세력 안에서 유대인 배척이 성장하고 있다. 유대인 배척은 동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더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나치인 요빅당[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이 2010년 총선에서 16퍼센트를 득표해 이제는 제3당이 됐다. 요빅당의 유럽의회 의원 후보는 “유대인들과 무장 투쟁”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요빅당은 2월에는 예전에 유대교 회당이 있던 곳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헝가리 유대인 12만 명은 이를 보며 역사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1944년 히틀러의 “최후 해결책”[유대인 말살 정책]이 절정에 달한 기간에, 불과 8주 만에 헝가리 유대인 43만 7천 명이 살해당했다. 헝가리 경찰과 관료들은 자기 구역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했다.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에서는 파시스트인 스보보다(자유당)가 일부 지역에서 40퍼센트를 득표했고 [대통령 야누코비치를 쫓아낸] 마이단 시위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다. 스보보다 지도자 올렉 타그니복은 모든 유대인 단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종 청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타그니복은 또한 ‘유대인 조직’이 우크라이나 언론과 정부를 장악했으며 범죄 행각을 통해 돈을 벌었고,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황금새벽당의 지도자 니콜라오스 미할롤리아코스는 가스실과 죽음의 수용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제2차세계대전 중 그리스 유대인 인구의 81퍼센트였던 7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는데도 미할롤리아코스는 이를 부인하는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 파시스트와 우익들이 갈수록 유대인 배척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유대인 배척의 부상 및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좌파의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유대인 배척 확산이 무슬림 혐오와 로마인·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확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유럽의 정부들과 제도권 정당들이 조장한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이 기승을 부린 덕분에 극우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최근 유대인 배척이 대두한 것은 무슬림 혐오와 아랍인 인종차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가다. 비극이게도, 프랑스 좌파는 대부분 정부가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것에 맞서지 않았다.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로



“비니차의 마지막 유대인”
제2차세계대전 중 우크라이나 비니차에서 독일 병사가 유대인을 총살하고 있다.

유럽에 새롭게 번지는 유대인 배척

파시스트 정당들은 수년 동안 숨겨 왔던 유대인 배척이라는 오물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왜 그들이 지금 그럴 자신감을 얻는지, 그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좌파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점차 커지는 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롭 퍼거슨**이 살펴본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http://wspaper.org>)에서 볼 수 있다.

마인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집권당인 청년민주당(Fidesz)의 창립자이자 총리 빅토르 오르반의 친구인 잘트 베이어는 다음과 같이 썼다.

“집시는 대부분 국민들 사이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짐승이다. 단 언컨대, 이 짐승들은 존재해선 안 된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80년대 이래 파시스트 정당들은 전략을 바꿨고 그 때문에 많은 좌파들이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프랑스의 대표적 파시스트인 장-마리 르펜과 그의 딸 마린 르펜은 표를 얻고자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이미지를 바꾸었다. 이를 위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주장을 이전보다 누그러뜨리고 나치식 경례도 줄였다. 파시스트들의 주된 무기가 무슬림 혐오로 바뀌면서 마린 르펜, 영국국민당(BNP) 닉 그리핀과 영국수호동맹(EDL) 등 유럽의 일부 파시스트들은 “이스라엘의 친구”를 자처하기까지 했다.

이런 기회주의는 파시스트들이 무슬림을 주되게 마녀사냥하면서 기반을 다지려 하는 더 큰 전략의 일부였다. 그리핀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유대인 배척을 내세웠다면 BNP의 선거 승리는 날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파시스트들이 단지 이데올로기적 향수 때문에 유대인 배척을 꺼내 드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치 위기가 가장 극심한 나라들에서 유대인 배척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헝가리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2가 스위스 화폐(스위스 프랑)로 이뤄졌다[대출금을 갚을 때 스위스 프랑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금융 위기로] 하룻밤 새 헝가리 화폐(포린) 가치가 폭락했고 대규모 주택 압류가 뒤따랐다. 2013년 5월 요빅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유대인총회(WJC) 밖에서 “유대인들이 헝가리를 뚫째로 사들여려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는 금융 위기뿐 아니라 홀로코스트로 가족과 집을 잃은 헝가리 유대인들에게 정부가 주는 (쥐꼬리만 한) 보상금도 겨냥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 위기로 세계 철강 가격이 떨어지자 큰 타격을 입었고, 해외 차관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제는 15퍼센트 수축했고, 화폐 가치는 40퍼센트나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보보다 지도자는 “유대인 조직”을 운운하며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파시스트들은 자신들의 무기고에서 유대인 배척이라는 무기를 없애는 것을

항상 주저할 것이다. 파시스트들에게는 금융 기관과 대기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 분노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로 향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유대인 배척과 “유대인 금융자본”이라는 생각은 로마인이 나 무슬림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유럽 파시스트들은 역사적 딜레마에도 봉착해 있다. 프랑스 비시 정부처럼 제2차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반동적인 정권들은 지독하게 유대인 배척적이었고, 나치와 협력해 유대인을 가스실로 내모는 것을 거들었다.

파시스트들은 바로 이 정부들을 미화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 정체성을 자신들이 대표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때문이다. 유럽 파시스트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탈바꿈하려고도 했었지만,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제2차세계대전 이전 형태로 복귀하려고 한다. 자신들은 전혀 유대인 배척이 아니라고 말하던 것에서 이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국가 정체성

동유럽의 역사는 특히 가혹했다. 차르와 유럽 귀족들은 유대인 배척을 무기로 삼았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스탈린이 러시아 우월주의를 되살리고 소련 제국을 이루려고 유대인 배척을 되살려 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배를 겪은 경험이 있다. 당시 기근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도 있었다. 스보보다는 이런 경험을 이용해, 파시스트를 “유대인 불세비키”와 싸운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조직할 수 있었다.

파시즘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 사실, 유럽의 파시스트들이 골수 나치 사상을 드러내는 것은 자승자박이기도 하다. 압도 다수의 유럽인들은 여전히 홀로코스트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험은 이스라엘을 방어한다면서 무슬림 혐오를 방지하거나 무슬림에 대한 적대적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 준다. 또한 소수 무슬림들이 가끔 보이는 유대인 배척을 나치의 유대인 배척과 동일시하는 것이 왜 잘못된지도 보여 준다. 물론 우리는 어떤 형태의 유대인 배척도 용납할 수 없지만, 소수 무슬림의 유대인 배척과 나치의 유대인 배척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파시스트 진영이 아니라 우리 편을 분열시키는 재앙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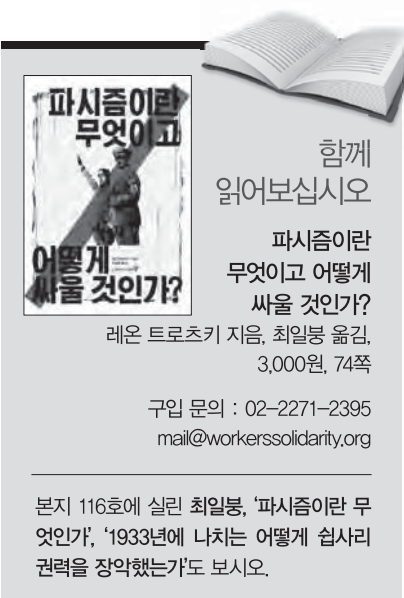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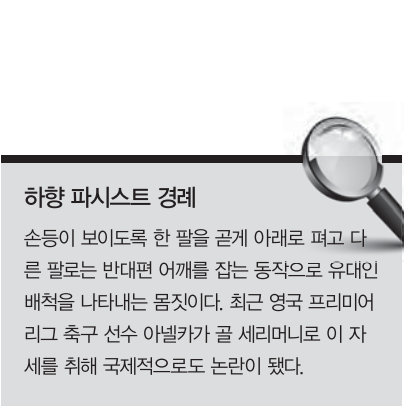
유럽 좌파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파시즘과 대적하는 데서] 국가와 법적 제재를 활용하자는 생각이 틀린 것이고, 그런 생각이 파시즘과 국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프랑스와 헝가리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치 정당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파시즘에 맞서 싸울 잠재력이 유럽 도처에 있다. 영국의 BNP와 EDL이 시도한 운동이나 행진은 단결된 반대 운동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리스의 황금새벽당은 대중적 분노와 시위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학생 수천 명은 이민자 가족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동유럽에는 파시즘의 재등장에 몸서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과 함께 파시즘을 막을 수 있다.

위기와 긴축 정책이 절망과 고통을 키우자 유대인 배척이 다시금 수면 위로 나오고 있다.

첫째 과제는 파시스트들이 결코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이처럼 추악하고 무시무시한 것을 양산하는 체제에 대한 혁명적 대안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4년 3월호 / 번역 김중환



본지 116호에 실린 최일봉,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1933년에 나치는 어떻게 쉘사리 권력을 장악했는가도 보시오.

Q&A

배앗긴 통상임금, 이제는 되찾자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또다시 노골적으로 통상임금 축소를 획책했다. 정부는 국회 환노위 노조성 소위 논의조차 거추장스럽다며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기업 편들기에 노동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임금체계 개악안 발표에 즉각 반발하며 “올해 입단투는 더 고조·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금속노조는 3월 초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7~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통상임금 ‘전쟁’을 앞두고 이번 투쟁의 의미를 되짚고 현재 제기되는 몇가지 물음들에 답한다.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왜 중요하기?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의 통상임금 축소 공세에 많은 노동자들이 열불을 터뜨리고 있다. 한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대충 갖고 애크 학비 대느라 휴일도, 주말도 없이 등골 빠지게 일했는데, 알고 보니 한 해에 거의 1천만 원 정도씩 떼먹혔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이 도둑놈들이 아예 장물을 내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둑질을 하겠답니다. 이런 파렴치한들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그동안 도둑맞은 임금은 수십조 원에 이른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개인당 월평균 통상임금이 52만 원 이상 늘고, 이에 따라 야간·연장·휴일 수당 같은 각종 수당들이 늘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하다.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기본 생계, 양육,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거의 유일한 수단이고, 미래의 흥망을 노후를 지탱시켜 줄 일종의 보험이다.

통상임금 문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 때문에 잔업·특근에 시달려 왔다. 기업주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들을 부리려고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을 대폭 낮춰 왔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백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제조업에선 이



사진제공: 한국노총

임금 벌충을 위해 잔업·특근에 시달리는 자동차 노동자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0퍼센트대다.

수치가 절반도 안 되는 40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정상화돼야 노동시간도 줄일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자들이 정치 활동에 참가하는 데도

필요하다.

첫째,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헐값에 쥐어짜려는 지배자들의 공세에 맞선 중요한 반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헐값에 쥐어짜려는 지배자들의 공세에 맞선 중요한 반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헐값에 쥐어짜려는 지배자들의 공세에 맞선 중요한 반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정상화돼야 노동시간도 줄일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자들이 정치 활동에 참가하는 데도 필요하다. 첫째,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헐값에 쥐어짜려는 지배자들의 공세에 맞선 중요한 반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헐값에 쥐어짜려는 지배자들의 공세에 맞선 중요한 반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헐값에 쥐어짜려는 지배자들의 공세에 맞선 중요한 반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기순이익

내가 뛸면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사는 당기순이익이 몇 조 원이 되느니 하며 돈을 벌었다는데, 거기서 임금 올리는 것은 내 권리가 내 힘이고 내 투쟁인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임금 정상화는 대기업 정규직의 이기적 요구인가?

지배자들은 통상임금 반환 요구를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통상임금 반환을 바라는 이들은 대기업 정규직만이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버스 노동자들, 환경미화원들도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가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통상임금 캠페인이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광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난 2월에는 캠페인의 결과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노조가 결성되기도 했다.

둘째, 그럼에도 주로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들이 투쟁의 주축인 게 사실이다. 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을 빼앗길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더구나 이들이 앞장서 투쟁을 벌인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고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정규직 노조가 통상임금을 되찾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시킨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을 산정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도 유리하다.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일각에선 벌써부터 ‘어차피 타협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인 “통상임금을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날조하는 것도 통상임금 투쟁을 선전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열망에 재를 뿌렸다.

그러나 현대차가 지난 몇 년간 사상 최악 매출을 기록할 동안,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일부를 떼먹혀 왔다. 노동자들이 이런 부당한 현실에 분개하며 때먹은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왜 무리한 것인가?

더구나 지금 정부와 사측은 우리 쪽에 불리한 조건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온갖 아비한 꾀수와 비난을 퍼붓고, 임금체계 개악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은 최근 노골적으로 통상임금 삭감을 선전하고 노조의 파업에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노조 집행부의 수세적 대응은 사측의 이런 기만 살려 줄 뿐이다.

다른 한편에선, ‘임금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며 임금은 좀 양보할 수도 있다

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이 둘은 모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노동운동의 중요한 요구였다.

게다가 임금이 낮으면 노동시간이 줄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려고 또다시 잔업·특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가 실시된 것은 한 발 진전이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 때문에 주말 특근이나 휴일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주6일 근무가 고착화된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기본급이 대폭 오르고 월급제 시행 등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돼야 장시간 노동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제 힘을 발휘해 강력히 싸움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 판결정이냐, 이제 체불임금은 찾기 어려워진 것인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의칙*을 들어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경우, 대법원 판결 날짜까지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 판결일인 지난해 12월 18일까지의 체불임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스스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규정(강행규정*)까지 위반하며 기업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 쪽엔 정당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주들에게 때먹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싸워 볼 수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의 기준으로 삼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어찌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래서 최근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기업주들에게 때먹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싸워 볼 수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로 우리 쪽에 불리한 조건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는냐는 계급세력의 힘 관계뿐 아니라 현장 투사들의 정치적 준비에 달려 있을 것이다.

투쟁의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앞서 지적했듯 우리 쪽의 수세적 태도나 양보·타협 시도는 투쟁에 전혀 도움

이 안 된다. 게다가 정부는 장시간·교대근무 업종들(자동차 생산직·간호사·은행 사무직 등)에서 주요 노조들을 겨냥해 작·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6면) 사측은 이를 활용해 최대한 통상임금을 줄이고 노조들을 압박할 것이고, 노동자들이 여기서 밀리면 한 발 더 나아가 연공급*를 허물고 임금체계 개악까지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통상임금 확대를 가로막을 장애물을 하나둘씩 만들며 착각 대응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조직노동자운동도 발 빠르게 투쟁을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기업주들은 이미 입단협 대응준비를 진척시켰을 뿐 아니라, 일부에선 통상임금 확대에 대비해 손해를 안 보려고 미리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저항을 무디게 하려고 현장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공격도 시작했다.

노동운동은 사측의 이간질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즉, 노조가 다수 조합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지키겠다고 임부의 희생을 수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최근 현대차 사측이 통상임금 확대 가능성이 대응해 “이중임금제”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대차 측은 이미 임금포크제* 도입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고, “업

무 분야에 따라 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제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중임금제도를 야금야금 수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미자동차노조가 잘 보여 줬다. 이 노조가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합의해 준 이중임금제도는 처음엔 신규사원 임금 삭감으로 시작됐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기존 직원 대부분이 작업장을 떠나면서 전 공장에 임금 하락을 강제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투사들은 이런 사측의 이간질 시도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적극 방어하면서 현장에서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중대한 노사 간 대립에서는 기업주들의 경영상 곤경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강행규정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우선한다는 조항으로, 이에 따라 ‘신의칙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우선할 수 없다’는 일부 대법원의 해석도 있다.
작무·성과급 한 사업장 안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가치나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체계.	연공급제 근속년수나 연령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임금체계. 호봉제가 대표적 사례.
이중임금제 한 사업장 안에 두 개의 임금대비를 따로 두는 제도. 신입사원들에게는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절반만 지급하게 하거나,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컷는 임금포크제가 그 사례.	임금포크제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예컨대, 최근 삼성전자가 60세에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 임금을 10퍼센트씩 삭감해 나가는 임금포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제 조업, 금융 노동자들과 함께 병원 간호사들의 임금체계를 다루고 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만나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정부 임금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매뉴얼은 임금의 성격 자체를 사용자 편향적으로 규정했다고 봅니다.

임금을 기업 경영을 위한 비용 문제로만 규정하기가, 직무급이나 직능급 같은 성과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동자들 처지에서 이견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여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배제하고 결국 연장근로 등 시간의 근로가 늘어날 수 있게 한 거고, 사용자 기 임의로 임금 지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도 무시한 채 일방으로 이런 매뉴얼을 발표했고, 이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사용자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통상임금을 낮추고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특별히 병원 간호사들의 임금체계 개편이 언급돼 있던데요.

병원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중소병원은 기본급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임금 자체가 워낙 낮아서 그나마 기본급 비율을 높여 어느 정도 맞춘 거죠.

그런데 대형병원은 대부분 상여금

로 해 놔서요. 사립대병원은 대부분 상여금이 1천1백~1천2백 퍼센트예요. 그것도 대부분 수당으로 돼 있어요.

지금 체결돼 있는 단협을 보면, 수당이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돼 있고 일할 계산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걸 다 통상임금화해야 할 판이죠. 이게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당직수당은 30퍼센트 이상은 뛰고, 임금은 전체적으로 10~12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밤 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대 후반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아예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하는 것 같아요. 입단협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노동부가 제시한 거죠.

게다가 매뉴얼 49쪽을 보면 평가간호가 쓰고는 팔호에 노조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동조합을 겨냥해서 한 규정이에요. 매뉴얼이 사례로 든 게 “자동차 제조사 생산직”, “은행 사무직”, “병원 간호사” 이렇게 세 가지인데, 결국 금속노조,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라는 대표적 산별노조를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간호사로 승진하지 않는 한 다 3교대 근무를 해요. 주일 정도 되면 원래 밤 근무를 빼 주기도 하는데, 입산부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고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가 밤근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주일 간호사까지 밤 근무를 시켜요. 심지어 아이가 50이 넘어도 승진 못 하면 밤 근무를 시켜요.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평균 15~20퍼센트나 돼요. 또 한 명이 그만두면 연쇄적으로 그만뒤요. 합틀기도 하

고 분위기가 타는 거죠.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간호사들의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40세 이상이 되면 은근히 나가 줘야 한다고 바라는 측면이 있어요.

간호사 수에 따라 병원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호등급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등급이 높을수록 수가가 비싸져요. 간호사 수가 의료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매뉴얼은 그걸 완전히 무시해요. 매뉴얼 내용을 현장 간호사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바로 “그럼 오래 다니지 말고 다 그만 두라는 얘기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간호사들이 승진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가간호사로 시작해서 주임(책임) 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장, 간호부장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 아예 포기하죠.

지금은 마흔 살이 넘어도 수간호사 되기 쉽지 않아요. 중소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 25~30명 당 수간호사가 1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중간 그레이드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간호사로 승진하지 않는 한 다 3교대 근무를 해요. 주일 정도 되면 원래 밤 근무를 빼 주기도 하는데, 입산부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고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가 밤근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주일 간호사까지 밤 근무를 시켜요. 심지어 아이가 50이 넘어도 승진 못 하면 밤 근무를 시켜요.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평균 15~20퍼센트나 돼요. 또 한 명이 그만두면 연쇄적으로 그만뒤요. 합틀기도 하

고 분위기가 타는 거죠.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간호사들의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40세 이상이 되면 은근히 나가 줘야 한다고 바라는 측면이 있어요.

간호사 수에 따라 병원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호등급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등급이 높을수록 수가가 비싸져요. 간호사 수가 의료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매뉴얼은 그걸 완전히 무시해요. 매뉴얼 내용을 현장 간호사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바로 “그럼 오래 다니지 말고 다 그만 두라는 얘기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간호사들이 승진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가간호사로 시작해서 주임(책임) 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과장, 간호부장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 아예 포기하죠.

지금은 마흔 살이 넘어도 수간호사 되기 쉽지 않아요. 중소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 25~30명 당 수간호사가 1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중간 그레이드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간호사로 승진하지 않는 한 다 3교대 근무를 해요. 주일 정도 되면 원래 밤 근무를 빼 주기도 하는데, 입산부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고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가 밤근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주일 간호사까지 밤 근무를 시켜요. 심지어 아이가 50이 넘어도 승진 못 하면 밤 근무를 시켜요.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평균 15~20퍼센트나 돼요. 또 한 명이 그만두면 연쇄적으로 그만뒤요. 합틀기도 하

고 분위기가 타는 거죠.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간호사들의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40세 이상이 되면 은근히 나가 줘야 한다고 바라는 측면이 있어요.

간호사 수에 따라 병원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호등급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등급이 높을수록 수가가 비싸져요. 간호사 수가 의료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간호사로 승진하지 않는 한 다 3교대 근무를 해요. 주일 정도 되면 원래 밤 근무를 빼 주기도 하는데, 입산부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고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가 밤근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주일 간호사까지 밤 근무를 시켜요. 심지어 아이가 50이 넘어도 승진 못 하면 밤 근무를 시켜요.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이에요.

세계는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립은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준다.

냉전이 해체된 후 지금까지도 세계화 담론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국민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과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은 역사 속의 유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것은 명백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냉전의 부활(신냉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미국 네오콘과 대다수 주류 언론이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냉전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냉전이 다시 올지는 푸틴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신냉전이 왔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서방)과 러시아가 지정학적 주요 지역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강대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냉전 때와 유사한 진영 논리가 팽배해졌다는 것도 신냉전론의 근거다. 예컨대 일부 주류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의 구실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의 대외관계 담당자 닉 윌트니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나토의 관점에서는 천우신조”라면서 “나토에 수명 연장의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또한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중국·러시아·북한 대 미국·일본·남한이라는 냉전 때의 갈등 구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진영 논리?

그러나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주장은 여러모로 오늘날의 제국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냉전 체제란 국가 간 경쟁이 양대 초강대국 블록이라는 양극적 틀 속에 우겨넣어져 양국의 동맹국 지배자들이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질서를 뜻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그런 질서가 세계적 차원이나 유럽(혹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냉전 때 서방 진영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미국은 그때만큼의 힘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20여 년 전 동구권이 붕괴할 때 미국은 전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패권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상대적으로 약화해 왔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력 분포가 장기적으로 변화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해 온 반면에, 유럽과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역동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은 소련이 붕괴하고부터는 다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전후로 미국의 헤게모니는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실패 때문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대러시아 전략에 미국의 유럽 쪽 동맹국들을 일사불란하게 규합하지 못해 왔다.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2008년에 미국이 구상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계획을 거부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크림 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에 강경한 제재 조치를 하는 데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주저하고 있다.



2012년 세계 주요국들의 GDP(국내 총생산) 비교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장기적으로 하락했지만, 미국과 나머지 주요 선진국들의 GDP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는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한국 지배자들 다수는 전통적 한미 동맹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이를 유일한 선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자들 사이에서도 만만치 않다.

지역 강대국의 도전

그리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러시아 경제는 2000년대 중반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커다란 이익을 봤다. 이를 바탕으로 푸틴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추진한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포위에 맞서 옛 소련 소속 공화국들을 러시아 세력권에 다시 편입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연평균 8~10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것은 가히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했다. 이 덕분에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행위자로 급부상했고 군사력도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 지배자들은 자국의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주변 지역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제국의 과잉 확장”이라고 부른 교착 상태에 미국이 처해 있는 것을 이용

했다. 다른 열강과 달리, 미국은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전 세계 곳곳에 역량을 넓게 분산시켜야 하는 동시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의 역량을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변 지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유럽 등지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며 갈등을 키워 온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 강대국의 도전을 신냉전의 도래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태를 상당히 과장하는 것이다. 비록 소련 붕괴 직후에 비해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회복됐지만, 미국에 비하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중국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여전히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비록 재정 적자 때문에 군사비를 줄이고 있지만, 미국은 경쟁국들에 견줘 여전히 압도적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에 퍼진 1천여 곳의 해외 군사기지 네트워크와 동맹국들을 통해, 미국은 군사력을 세계 곳곳에 투사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하루 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국 주변의 국가를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한참 못 미친다. 예컨대 중국이 아시

아에서 영향력을 늘리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인도·일본·호주·남한 등 만만찮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은 서로 분열돼 경쟁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도 엇갈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대외 정책에서 단결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간질을 시도해 왔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몇몇 지역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며 지정학적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도전할 형편이 못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정 기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극화하는 세계

그러나 오늘날 제국주의 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적 질서에서 제국주의 열강이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을 벌이며 다극화하는 질서로 점차 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2008년 11월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트렌트 2025>에 내놓은 전망이 바로 그러하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체제는 2025년에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해 있을 것이다. … 2025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력 차이가 계속 좁혀짐에 따라 국제 체제가 세계적 다극 체제로 변해 있을 것이다. … 비록 미국은 그때도 세계 최강의 행위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상대적 힘은 심지어 군사적 측면에서도 약화될 것이고 미국의 의지 관철 능력은 더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제국주의 질서가 신냉전 상황 아니라는 것이 세계가 평화롭고 자유롭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열강의 이해 각축으로 세계는 더욱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오랫동안 동아시아 정세는 불안정에 휩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불안정이 미래에 특정한 돌발 사태와 맞물린다면, 이것이 강대국 간 정면 충돌로 가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좌파의 과제

냉전 시절에 양대 진영이 첨예하게 경쟁을 빚자, 이 대립은 당시의 좌파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특히 양대 블록

가운데 좀더 진보적으로 보이는 진영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끌리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양 진영의 갈등이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좌파 내에서 더 큰 혼동을 일으켰다.

지금 그때만큼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은 없지만, 여전히 국제 좌파들은 서방과 러시아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끌리는 듯하다. 예컨대 다수의 동유럽 좌파는 유럽연합에 대한 환상 때문에, 또 서방 진영의 좌파는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 때문에 반대편의 제국주의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남한에서도 일부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와 대립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보지 않거나, 티베트 억압 같은 중국 제국주의의 문제에 침묵하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도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에 장문의 기사가 실린 정기열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서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지구촌의 모든 반제자주세력이 러시아와 함께 이심전심으로 음모로 양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 싸우고 있는 세계반제자주 대결 차원에서 이해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에서 이채연 교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구도에서는 종립적 입장이 성립할 수 없다. … 친구가 아니면 적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이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체제를 말한다.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처럼 미국과 경쟁하는 강대국들도 제국주의 체제의 일부다. 러시아와 중국 등이 미국보다 더 약한 세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자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경쟁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자국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점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다를 게 전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우리는 우리 지배자들에 맞서면서, 반대편에서 자국 지배자들에 대항하는 노동자들과 국제주의적 단결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좌파는 제1차세계대전 당시 레닌이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더 오래됐고 [식민지를] 많이 잡아 먹은 강도[영국, 프랑스]에 맞서 더 강하고 더 짧은 강도[독일]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들 전부를 전복하기 위해 강도들의 싸움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주의자들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즉, 이 전쟁은 노예제를 공고히 하려고 벌이는 노예 소유주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진실 말이다.”

김영익

추천 도서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 | 천경록 역
책갈피 | 400쪽 | 2만 원

한·미·일 정상회담

동아시아 불안정과 모순을 보여 준 회담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오바마 정부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4월 오바마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가했다.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 유지 전략인 “아시아 재균형(아시아 귀환)”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오바마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커다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오바마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중동·동유럽 등지에도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자로 병력과 군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처지에 말이다.

따라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기 위해 일본·한국 등의 동맹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

그런데 2012년 한일 군사협정 논의가 체결 직전에 중단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꺾끄러워지자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를 우려해 왔다.

얼마 전부터 오바마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한일 관계가 소원한 것이 미국이 패권 유지 전략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해 왔다. 3월 4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니얼 라셀은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미·일 3자 협력 강화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누구도 역사 문제의 부담으로 인해 우리가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며 한국과 일본을 압박했다.

지난 2월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도 박근혜한테 과거사에 연연하지 말고 시급히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때 케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

유로 든 것이 바로 “북한 위협”이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가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한 것은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과 대북 압박에 힘을 실어 준 것이었다. 그래서 3월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합참의장 최윤희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및 “일본과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3월 25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합동 군사 훈련이나 미사일 방어 체제(MD) 등을 포함해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자고 했다. 그리고 3국 협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자고 제안했다.

물론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이는 게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바마가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

야 한다”고 얘기했으니 말이다. 오히려 최근 일본과 북한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 등을 의식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북 관계에서 자신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하다.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문제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DTT가 2009년에 창설돼 비밀리에 유지되다가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 문서를 폭로하면서 그 실체가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제 이런 3자 국방 회담을 공개적으로 연다는 것인데, 여기서 MD를 고리로 삼아 대중국 포위를 위한 군사 협력 과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의 좋은 명분을 얻으려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MD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아베 정부는 다시 과거사 왜곡에 나섰고, 이 때문에 한국 내 여론은 다시 격앙됐다.

이런 점을 봐도 앞으로 오바마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자신의 전략을 관철하려면, 여러 책략을 계속 동원해야 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

아무튼, 미국·일본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경쟁이 커지는 이때, 박근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더 불안정해지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동맹 구축이 진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박근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정상 회담을 했지만, 이것이 한·미·일 동맹 구축에 관한 중국의 경계를 풀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대북 압박과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을 엄청나게 자극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시각에 맞춰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정상회담을 겨냥해 북한이 보낸 메시지라는 것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메시지’에 미국은 이 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는 것으로 답했다. 미국은 적어도 한일 군사협력 강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미일 신 가이드라인 재개정 등 한·미·일 동맹 구축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기 전까지는, 북한과 공식 대화 테이블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 전개는 결국 한반도에 긴장의 먹구름을 불러올 수 있다. 박근혜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협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이런 우려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한·미·일의 대북 군사 압박이 강화되면,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하는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익



중국 포위에 혈안이 된 오바마에게 한국 민중이 일본 정부 우경화에 반발하는 것은 자신의 전략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다.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추악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의 여동생을 고문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고 이웃 나라의 공문까지 위조했다.

이 사건은 탈북자들이 남한 국가기관에 의해 공안사건의 희생자가 돼 왔음도 보여 준다. 탈북자 중에 위장 망명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퍼뜨려 탈북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조장해 온 것은 다른 아닌 남한 정부였다.

2000년대 중반 이래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2013년 현재 총 2만 6천여 명). 그러자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탈북자들이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기서 국정원은 탈북자들을 잠재적 간첩 취급하며 강압 수사를 벌였다.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독방에 갇혀 국정원 직원한테 폭언·폭행을 당하고 전기고문 협박을 당한 곳도 이곳이다. 변호사 접견이나 면회, 편지 교환 따위는 일절 허용되

지 않았다.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무법지대였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유가려 씨만이 아니었다.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한 몇몇 탈북자들은 스스로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2011년 ‘간첩 혐의’가 드러나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한 탈북자도 이런 과정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해외를 떠돌다가 가까스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가장 처음 맞이한 것이 폭언과 폭행, 독방 따위였던 것이다.

이것은 남한 정부와 우익이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탈북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 준다.

지금껏 남한 정부와 우익은 겉으로는 탈북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취해 왔지만, 정작 이들은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매우 냉혹했다. 이들은 오로지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거나 우파를 결집시킨다는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고 탈북자 문제를 활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남한 정부는 탈북자가 점점 늘자 쥐꼬리만 한 지원금조차 계속 줄여 왔다. 정

부는 “자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인 ‘노동 연계 복지’ 정책을 도입했다. 탈북자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보다 노동하게 해서(대부분 저질 일자리인데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정착기본금은 2004년 이전 3천5백90만 원에서 2014년 2천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신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급하는 장려금 비중이 확대됐지만, 2008~09년에 이 장려금의 수혜자는 기껏해야 그해 입국자의 3분에 1에 지나지 않았다.

나아가 지난달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며 정착지원금을 “본인이 저축한 만큼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탈북자의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다. 2012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자의 실업률은 19.9퍼센트로 한국의 공식 실업률 2.9퍼센트의 6배

이상이다. 간신히 고용돼도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임시직이므로 금방 실업자가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남한 거주 탈북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백 26만 원가량으로, 남한 전체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과 지원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탈북자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 결정 과정에서 심사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한사코 축소·반대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우익이었다.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중국과 북한의 엄중한 감시를 뚫고 위험천만한 탈북을 시도하는데도 말이다.

양질의 일자리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남한 지배자들이 이렇듯 탈북자 문제에서 보이는 위선을 들춰내는 동시에, 남한 국가가 탈북자의 인정적 삶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탈북자 옹호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

는 일이고, 진정한 좌파의 자세가 아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정부가 복지 재정을 대폭 늘려 탈북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공공서비스 확충 등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그중 일부에 탈북자를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불어 북한에서의 경력과 기술을 남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탈북자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들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벌어지는 강압적 탈북자 신문과 감시 제도도 폐지돼야 한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은 특정 업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방침도 차별 조치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에 남한 정부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탈북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중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탈북자와 모든 국민이 남북을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현주

스페인

2백만 명이 긴축 반대 시위에 나서다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긴축 반대 시위에서 사회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이 단결을 이루고 있다고 데이브 수엘이 전한다.

3월 22일, 2백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시위대는 긴축 중단과 은행 부채 상환 거부를 요구했다.

스페인 전역에서 모여든 여섯 무리의 “존엄을 위한 행진” 대열이 마드리드에 결집해 “빵, 일자리, 집을 모두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세빌라(세비아)에서 온 안달루시아노동자조합(SAT) 조합원인 교사 노동자 헤수스 카스필로(까스피요)는 이렇게 말했다. “[시위는] 대단했어요. 22일 시위는 내가 참가했던 어떤 시위보다 규모가 컸어요. 심지어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들보다 더 컸어요.

“안달루시아에서 [시위대가 탄] 버스 6백 대가 왔고,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 왔어요. 금융 위기 이래로 성장해 온 사회운동이 모두 한데 모였어요.”

2백 개 이상의 단체가 시위를 후원했다. 남부의 SAT, 바스크 지방의 바스크 노동조합(ESK), 아나코-신디컬리스트들의 노동총동맹(CGT) 같은 대안적 노동조합들이 시위를 건설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공산당과 연계된 시민전선(FC)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주요 총연맹인 노동자총동맹(UGT)과 노동자위원회(COOO)의 현장 조합원들은 이날 시위에 참가했지만, 두 연맹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사회 협약을 놓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거리에서 몰아내려고 무탄을 발포했다. 시위대 한 명은 부상이 너무 심해서 고환 한 쪽을 제거해야 했다. 그러나 1천 명 이상이 도심 광장에서 열린 [민중]의회에 참가해 운동의 전진을 두고 토론했다.

경찰

다음 날인 23일 시위대는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정부 청사 건물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25일이 돼서야 점거자들을 새로 생긴 “존엄 캠프”에서 몰아낼 수 있었다.

[시위대는] 스페인 전역에서 광장 점거 농성을 하자고 호소했다. 인디그나도스, 즉 ‘분노한 사람들’ 운동으로 더 잘 알려

진, 2011년 5월 15일의 ‘5월 15일 운동’을 떠오르게 하는 광경이었다.

까스피요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시작하길 바라요. “2011년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정당도 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거나 어떤 정치적 깃발도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은 이제 옛날 얘기에요. 사람들은 노동자 투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어요.”

2011년부터 총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사회운동 진영의 압력을 받아 열렸다. 강제 퇴거에 저항하는

대중적 운동도 있었고, 전투적 부문 파업도 있었다.

금융 위기와 일련의 부패 스캔들이 국왕과 주류 정당들의 정통성을 약화시켰다.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독립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신생 정당들이 성장하고 있다. 까스피요는 보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뜻)라는 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 대중 운동이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광장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2년에 걸쳐 긴축에 맞선 단결에 대해 토론한 끝에, 이제 그 단결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96호 / 번역 김준효



“긴축은 꺼져라. 빵과 일자리, 집을 달라!” 사회운동이 노동자 운동과 결합될 때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3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우크라이나

강대국들의 각축전 속에 극심한 긴축을 앞두고 있는 노동계급

사이먼 바스케터

3월 24일 러시아는 최고 경제 대국들의 모임[G8]에서 쫓겨났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림반도를 차지한 것에 세계 지배자들이 응징을 한 것이다.

세계 지배자들이 헤이그에서 긴급 회동을 하는 동안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항복하거나 러시아 군으로 합류하거나 군사 시설에서 쫓겨났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동쪽 국경 주변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증강되고 있다.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두고 서방은 분열했다. 미국은 푸틴의 최측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유럽연합은 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과 해외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다. 그 이유의 하나는 유럽연합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이다.

진보적 제국주의?

온갖 말이 오고가는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데쉬차가 만났다.

이런 국제적 이진투구 속에 “차악”은 없다. 더 중요한 점으로, 진보적 제국주의는 없다.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강요할 권리가 서방에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과 주변 지역 병합은 이 지역을 계속해서 거대 열강의 이해관계 아래에 놓이도록 만든다.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유럽 지배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판알을 뱅기고 있다.

유럽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의 열 배이고,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최대 고객이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트해 연안 곳곳에서 첩보 활동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군 장군이자 나토군 총사령관인 필립 브리드러브는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몰도바의 일부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를 병합하려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서방의 전진에 제동을 걸고 러시아의 힘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서방이든 러시아든 둘 다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태는 견잡을 수 없이 흐를 수도 있다.

러시아가 개입하든 서방이 개입하든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 될 것은 없다.

한편, 3월 21일에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정치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핵심적으로는 지난해 11월, 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거부했던 협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아침 찬 구조 개혁에 재빨리 착수”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주문했다.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은 극심한 내몰을 뜻한다.[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정용 가스비를 50퍼센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96호 / 번역 차승일

마리카나 학살 이후 계속되는 급진화

남아공의 새 노동자 정당 추진 움직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회주의 활동가인 레하드 데사이가 남아공의 새 노동자 정당 추진 움직임을 전한다. 레하드 데세이는 마리카나 광원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총에 맞아 쓰러진 광원들〉(Miners Shot Down)로 국제 인권영화제에서 ‘알 권리 상’을 수상한 영화 감독이기도 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 상황이 아파르트헤이트(인종 격리 정책) 해체 이후 가장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다. 급속노조(NUMSA)가 [상급단체인] 남아공 최대 노총 코사투(COSATU) 지도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코사투 사무총장 조엘렌지마 바비의 정적 결정에 반감을 표했다.

코사투 산하 19개 노조 중 9개와 급속노조는 코사투 특별대의원대회를 옹해 말에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그 결과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했고 코사투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소집을 막기 위해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12월, 벨스 만델라 사망 1주일 뒤에 열린 급속노조 특별대의원대회는 다른 노조들과, 또 그동안 함께 행동해 온 좌파 사회단체들과 공동 투쟁체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 투쟁체가 노동자 정당 건설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급속노조 지도부는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옹해 말에 [정치 세력화를 위한] 대회를 열고 2015년까지 새 조직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많은 남아공인들이 만델라의 죽음을

기리며, 만델라와 남아공의 현재 대통령 제이콥 주마를 비교하고 있다. 이런 정서는 새로운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20년째 시행되고 있는 임금 억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런 정서를 키워 왔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자, 자본가들은 높은 자신감 속에서 임금 인상요구를 묵살했다. 당시 코사투 노조의 지도부들은 자신들의 구실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오늘날 코사투는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 정부, 남아공공산당(이하 SACP)과 동맹을 맺고 있다). 임금 수준은 일부 숙련직을 제외하면 모든 부문에서 동결됐다.

지난 6년간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해 35~40퍼센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초식료품 가격은 폭등했다.

많은 사람들은 ANC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았고, ANC 최고 지도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부패가 만연하면서 이런 인식이 더 강화됐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자극한 것은 불평등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만이 부의 재분배를 가능케 한다며 그런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마리카나 학살

마리카나의 광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경찰이 발포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백인 자본가 계급에서 흑인 중간계급으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흑인 중간계급의 일부가 자본가들로 상승할 기회만이 생겨났던 것이다.

자본 축적을 위해 정부가 물, 전기, 주택, 쓰레기 수거 같은 대중의 (사회·경제적) 기본권마저 희생시킨 결과(이는 만델라가 남긴 ‘유산’이기도 하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

이 때문에 폭발적인 수준으로 시위가 늘었고 더 격렬해졌다. 남아공에서는 연평균 7천 건에 이르는 시위가 일어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에는 파업도 급증했다. 2010년 6주에 걸친 공공부문 파업은 실로 웅장했고 계급 반란의 시작을 보여 줬다. 교사와 간호사들이 외설적 노래로 대통령 주마를 조롱하고 ANC 지지자들에게 면박을 줬다.

계급 반란

주마 정부 아래에서 공산당은 ANC 정부를 지지한 대가로 고위직에 진출하고 정부 요직에 앉고 다수 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했고, 광범한 부패는 전혀 줄지 않았다.

2012년 8월, 마리카나 학살*은 이 모든 것의 정점이었다. 코사투 내 최대 노조이자 조합원이 32만 명인 전국광원노조(NUM)가 공산당을 따라 파업 노동자들을 비난하자 광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고, 노조 탈퇴가 잇따랐다. 대체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 달 뒤 코사투 대의원대회에서 공산당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한 바비를 제거할 책략을 부렸다. 이 시도는 실패했다.

같은 달, 45건의 비공인 파업이 일어



화물 노동자들이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다

화물연대가 3월 29일 국회 앞에서 전 조합원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화물연대의 5대 요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화물 노동자들은 1990년대까지 운송 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였다. 학습지, 건설기계 등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산업이 호황일 때 정규직으로 고용된 화물 노동자들은 화물 운송 경기가 주춤하자 지입차주, 즉 특수고용노동자가 됐다. 운송업체는 지입차주에게 운송료를 조금 더 많이 주는 유인책을 쓰기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노동자들에게 팔고 지입계약*을 맺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위험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화물운송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 발급 요건들을 갖추기 어려운 화물 노동자들은 매달 수십만 원의 지입료를 주며 지입계약을 맺은 운송업체의 번호판을 자신의 화물차에 달아야만 화물운송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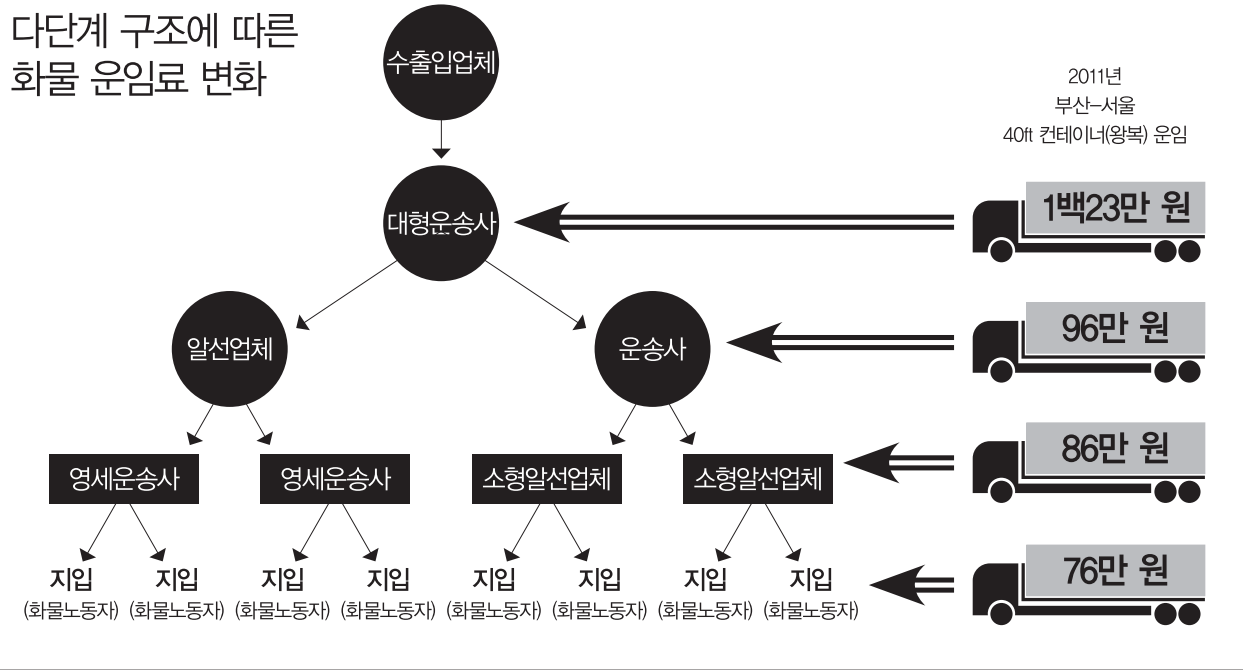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차량등록증의 명의를 운송업체로 변경하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2억여 원의 빚을 지고 구입한 화물차의 소유주가 운송업체로 바뀌어 버린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악용해 운송업체가 실제 차주인 화물 노동자도 모르게 차량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차량을 대·폐차 처리하기도 한다.

지입제 하에서 양산된 불법 다단계 구조는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을 배가시킨다. 화물운송물량은 확보하지 않고 단지 지입료로만 먹고사는 지입전문회사가 화물운송업체 중 절반이 넘는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들은 지입회사에는 지입료를, 화물운송을 주선해 주는 운송업체에는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몇 단계에 걸쳐 운송료의 일부를 뜯긴다.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화주(화물)을 운송해 달라고 맡긴 업체가 지불하는 운송료의 60퍼센트 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불법 다단계 구조를 근절하겠다고 시행한 직접운송의무제는 오히려 운송업체들이 번호판을 무기로 휘두르게 만들어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화주의

다단계 구조에 따른 화물 운임료 변화



자료 출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013년 12월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지입계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기준대수, 자본금 등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차주(화물노동자 / 지입차주)가 명의를 보유한 사업자(운송업체)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차량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를 납부하는 사업형태. 이는 계약의 형식으로 성립하는데 이를 지입계약(위수탁계약)이라 칭함.

운송 의뢰를 직접 받는 대형 운송사의 경우 화물의 60퍼센트를 직영차량으로 운송하고 나머지를 2차 운송사에 위탁할 수 있다. 2차 운송사는 대형 운송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1백 퍼센트 직영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대형운송사의 직영차량 비율이 5퍼센트밖에 안 되고 2차운수업체들도 직영차량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지입전문회사에 수

천만 원을 주고 번호판을 사오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와 같이 화물 물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화물운송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자회사들이 번호판을 확보하려고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 운송업체들이 번호판 확보 경쟁을 하며 번호판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운송업체는 번호판 장사를 위해 회사에 소속된 화물 노동자에게 지입계약 해지를 강요하기도 한다.

노예계약

대구경북의 한 화물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낮은 운송료와 번호판을 불모로 한 운송사의 횡포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하루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쭉잠’, ‘갈치잠’을 자며 일을 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데다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

포항에서 H빔을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노동자의 경우 보통 오후 2~3시에 들어가서 다음 날 새벽 4~5시가 돼야 비로소 짐을 싣고 출발한다.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녘에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화물과 졸음운전 사고의 위험도 함께 싣고 도로로 나서는 것이다.

화물차량 구입 때문에 대출받은 돈을 매달 2백50만~3백50만 원씩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낮은 운송료에도 울며 겨자 먹

기로 일을 해야만 한다. 한 번이라도 더 운송을 하려고 과속과 속칭 ‘따당’(서울-부산과 같은 장거리를 하루에 왕복하는 행위)과 같은 위험한 운송 행태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위치 추적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워진 차 안에서 잠들었다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벌어진다.

더구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고자 저항에 나서려 할 때 발목을 잡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운송회사들은 ‘지입계약 시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조, 상조회 가입 금지’, ‘관리자의 업무지시 외에 일반(청소, 출입통제)지시도 무조건 따를 것’, ‘운송 거부 시 손해배상액 우선 공제’ 등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각서를 강요하기도 한다. 결국 화물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운송회사의 탐욕 앞에 차량도, 인간다운 삶도 저당 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2003년 5월 전국을 뒤쫓은 14일간의 전면파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12개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약속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대 요구 —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재산권 보장,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도로비인하 — 를 실현할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비상총회에서는 5대 요구 안 실현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상경 투쟁을 며칠 앞두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에 열린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다음 회의 때 진전된 안을 제시하겠다” 하고 말하며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거듭 약속을 파기해 온 정부가 국회에 계류된 법제도 개선안 통과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이 말로만 약속하는 것을 믿을 화물 노동자는 없다. 그래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는’ 화물 노동자들의 진정한 힘을 통해서 빼앗긴 삶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자 투쟁을 결의하는 것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은 삶까지 저당 잡혀 오늘날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는 38만 화물 노동자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장우성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산재,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지회장

3월 25일 현대중공업 내 드릴십(해상 플랫폼 설치)가 불가능한 심해 지역에서 원유를 찾아내는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의 조작(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던 선일ENG 소속 하청 노동자 3명이 무거운 건디지 못한 임시 플랫폼이 무너져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중 1명은 자력으로 헤엄쳐 나오고 1명은 동료가 구출했으나 고(故) 김종현 씨는 조작에 안전벨트를 맨 채 조작장과 함께 추락해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안전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시킨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구조 과정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사내 잠수부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구조를 지체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했고,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죽음에도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2012년 5월부터 하청노동자 3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고, 2014년에는 정규직 노동자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수도 없이 현대중공업 사측에게 책임과 철저한 사건 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도, 검찰도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이번 사고에서도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감독·지휘권이 있는 현대중공업은 철저히 피해 나갔고, 사내하청업체인 선일

ENG가 나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반복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은폐

2014년 1월 현재 현대중공업에는 2만 7천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세계 1등 조선소란 화려한 간판 뒤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산업재해가 사례 분석 중 통계적 법칙)은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다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백 명에 달한다는 법칙이다. 단언컨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산재를 은폐하려 혈안인 현대중공업에서 드러나

지 않은 사건·사고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12년부터 현대중공업의 만연한 산재 은폐를 집단 고발하고 투쟁을 이어 왔다. 하지만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산재 은폐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해고의 위협과 업체와 원청 부서의 압력은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은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의 수는 이미 고용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물량팀(10명 내외의 팀으로 구성돼 단기직으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2차 밴드(1차 하청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를 통해 음성적으로 늘어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수를 감안하면, 산

재 발생 위험은 갈수록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저가 수주와 환율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자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도급 단가를 삭감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조건은 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산재 사망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철저한 원청 책임성 강화와 책임자 처벌, 기간적인 자율안전관리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도 필요하다. 더불어 기형적 고용 형태인 물량팀 근절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폐업이라는 악랄한 탄압에도 조합원 수가 늘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3월 28일 서울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첫 대규모 상경 집회.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표적 폐업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삼성전자서비스가 센터들을 표적 폐업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3월 8일 해운대센터를 폐업했고, 아산·이천 센터는 3월 31일자로 폐업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동인천·분당센터 등은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3개월짜리 단기계약약을 맺었다.

이곳들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거나 노조 임원들이 있는 곳들이다. 핵심 센터들을 본보기로 삼아 집중 탄압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최근 폭로된 것처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는 센터장들에게 노조 탄압 교육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현황 보고까지 받았다. 원청이 노조 탄압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측이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노동자들에게 폐업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말이지 역적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기본급도 없이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으며 늘 불안정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이 적은 비수기에는 1백만 원도 안 되는 임금에 배를 곯아야 하는 이들이 수도룩하고, 성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몸 곯아 가며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이 수도룩하다. 악랄한 사측은 심지어 수리하러 이동하는 시간도, 제품 점검 시간도 모두 무급으로 돌리고, 오직 부품 교체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의 고향을 쫓내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금조차 떼먹고 있는 것이다.

고혈

사측은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지키지 않아, 지난 두 달간 확인된 불법 사항만 무려 21만 2천8백69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란 말인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실소유주인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은 한국의 부자 3위, 공개 재산만 3조 9천억 원이나 된다. 삼성전자 이사들의 평균 연봉은 52억 원이나 된다. 노동자들 덕에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부를 축적한 자들이 연봉 3천7백만 원도 ‘무리한 요구’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센터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직원이므로 우리와 상관 없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삼성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

고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것인가? 수리비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된다. 노동자들의 채용, 노동조건, 교육,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은 명백히 위장도급을 해 왔고, 이들이야말로 진짜 사장인 것이다.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도 노동자들은 주춤하기는커녕 단단하게 버티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폐업 후 오히려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마산, 창원, 구포, 서수원, 성북센터에 새롭게 노조 깃발이 올랐다.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조직 센터 동료들은 집단가입으로 화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측이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 전국 엔지니어들의 분노를 맞보게 할 것입니다.”

“[폐업되는 걸 보고서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삼성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삼성에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국이 해운대다. 우리가 해운대다!”

해운대센터 노동자들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선봉에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삼성의 위장도급을 뚫고 보란 듯이 복귀할 겁니다. 삼성의 폐업카드가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느끼게 해 주겠습니다. 삼성에게 이제 투쟁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남부의 모든 지역을 조직할 겁니다. 전국의 모든 센터들을 다니며 노동조합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소중한 성과들을 일구고 있다. 열사 투쟁으로 차량 리스, 유류비 지급 등 성과를 얻었고, 교섭에서는 기본급 지급 등 양보안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싸우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우리가 해운대다

현재 탄압에 굳건히 맞서면서 단결과 투쟁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저들은 가장 단단히 조직된 센터의 노동자들을 집중 탄압해 고립시키려 한다. “우리 모두가 해운대다”, “우리 모두가 아산, 이천이

다” 하는 노동자들의 구호가 소중한 이유다. 조직을 확대해 파업 효과를 높이고, 연대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구실도 중요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한 작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는 전체 노동운동이 전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에도 삼성에 맞선 투쟁은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이처럼 규모 있게 조직과 투쟁을 건설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매우 의미 있는 전진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측의 탄압 속에서도 파업을 이어가며 용기 있게 싸우고 있는 것이 많은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엔 같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SDI에서도 노조가 결성됐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투쟁기금, 해고자 생계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인 연대와 지원으로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을 뒷받침해야 한다. 골리앗 삼성에 맞서 싸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노동자 연대를 보여 주자.

조명지

케이블방송 노동자

작업장을 넘어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소속 씨앤엠지부(씨앤엠 정규직), 케이블비정규직지부(씨앤엠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요구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동종 업종의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라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케이블방송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들어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지로 내몰려 왔다. 케이블방송은 대표적인 간접고용 사업장이 됐다. 불법파견·위장도급이 허다하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사장들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몇 년간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씨앤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어 하반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노동조건을 개선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과 본사 점거를 벌였고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받으며 승리하기도 했다. 서로 투쟁을 고무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온 것이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

지는 여전히 높다. 올해 초에도 티브로드 사측이 고객센터에 영업실적을 강요하고 건당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철회해야 했다.

규제 완화

그런데 지난 2월 박근혜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유와 가입자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매각 예정인 업계 3위 씨앤엠을 업계 1, 2위인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씨앤엠이 매각되면 노동자들은 고용과 단협 승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완화는 업체 간 경쟁 강화를 촉발해 또다시 노동자들을 무한 경

쟁으로 내몰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블방송업체들이 지역 내 지방선거 관련 각종 토론회와 보도를 다루기 때문에 투쟁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이는 동종 노동자들과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

들의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4월 12일 ‘희망지하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한 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발해 보신각에 모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유병규

맑시즘2014

일시: 8월 7일(목) ~ 10일(일)
장소: 서울
주최: 노동자연대

※ 맑시즘은 14번째 열리는 대규모 마르크스주의 포럼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실질임금 10퍼센트 인상을 얻어 내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올해도 대학과
용역업체에 맞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3월 5일, 경희대 청소 노동자들이 6일
동안 분관 점거 농성과 파업을 벌여 경희
대 당국(원청)으로부터 임금 인상을 얻어
내고 나서, 이화여대, 광운대, 고려대, 연
세대, 서울여대, 홍익대도 비슷한 수준
으로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로써 올해
집단 교섭 대상 대학 14곳의 절반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해 시
급 5천7백 원(지난해 집단교섭 대학 기
준)에서 6천2백 원으로 인상되고, 식대
2만 원, 명절 상여금 1만 원이 인상된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약 9.8퍼
센트 인상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
임금 인상률(7.2퍼센트)보다 높은 수준
이다. 5천7백 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신규 대학 분회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쟁취했다.

고려대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학교 당
국이 일방으로 토요일 근무를 축소하면서
실질임금이 10만~20만 원 삭감됐는데,
이번 투쟁으로 손실분을 거의 만회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4백60원가량
오른 것이라서 노동자들도 그럭저럭 만족
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단
결력이 높아졌다. 복수노조 등장으로 조
직력이 취약해진 이공계 노동자들도 이번
파업에 참가했다.

수년째 등록금 동결·인하 압박을 받
는 상황에서 대학 당국들은 ‘해마다 임금
올려 달라고 떼쓰는 것을 참지 않겠다’며
처음에 섭사리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사
립대학이 대부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자, 대학
들은 직원 임금을 동결하거나 용역비 등
각종 경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
다. 장학금이나 교수 수를 줄이면 대학
평가와 그에 따른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
을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립금이 적
은 대학들은 이런 압박을 더 받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
지와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특히 투쟁



“대학 원청과 직거래하겠다” 몇 년간 투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해 자신감을 얻은 대학 청소 노동자들.

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는 올해도
대학 당국을 무릎 꿇렸다.

저임금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몇 해 전부터 노조를 만들고
투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임
금 인상을 쟁취해서 이제는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 돈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소 노동자 절반 이
상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인 것
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청소 노동자들
이 받는 돈은 올해 인상된 임금으로(시급
6천2백 원) 치더라도 한국노총 2013년
표준생계비의 34.8퍼센트에 지나지 않
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학교가 우리
에게 주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에 김치만 먹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절대 아프지 말라는 것과 같
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빵과 장미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단지
‘빵(임금)’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들은 ‘장
미(존중)’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학 54곳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불쾌한 인상을 주지 말 것”,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 금지”, “배회 금지”
등 인권 침해 요소가 가득하다. 실제로, 지
난해 노조가 조직된 대학들에서 노동자들
의 핵심 불만 중 하나도 관리자들의 폭언,
인격적 모독, 성희롱과 같은 문제였다.

이런 열악한 처지는 역으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여지가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한 폭넓
은 관심과 연대가 형성된 것도 대학에게
상당한 압력이 됐을 것이다.

학생들의 지지도 투쟁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면 언제나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가 잇따
랐고, 이는 대학 당국에 큰 압력이 됐다.
이 점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올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자마
자 학생 단체 54곳이 공동 지지 성명을
냈다.

고려대에서는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
중인 본관이 학생들의 지지 메시지와 대
자보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학교가 노동
자들의 점거 농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말하자,
학생회와 학내 운동 단체들은 즉각 “고려

대 당국은 건학 이념인 자유·정의·진
리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고도 감사한
일을 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천대하고 기
만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라”며 학교
를 규탄하고, 총무처에 가서 항의했다.

경희대에서도 학생들이 매일 아침 노
동자들과 함께 홍보전을 하고 기자회견
등으로 노동자들을 지원했다. 올해도
“학생과 노동자가 톱니바퀴 맞물리듯 같
이 싸운 것”(경희대 분회장)이다.

가장 먼저 성과를 거둔 경희대에서는
직원 노조(대학노조)의 구실도 중요했
다. 경희대학교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
은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에 와서 “직고
용돼서 한 노조에서 같이 싸우자”고 해서
환호를 받았다. 장백기 위원장은 대학 원
청과의 교섭에서도 청소 노동자와 함께
참가해 힘을 실어 줬다.

직거래

대학 청소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직고용을 쟁취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올
해 집단교섭에 나온 용역업체들이 노동
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원청에서 더는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자, 노동자들은
“여기 나온 것들은 다 껌떼기다”, “우리
는 껌떼기 필요없다. 대학 원청과 직거래
하겠다”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용역업체 자신이 시인하듯이, 청소 노
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
는 실질적 세력은 대학 당국이다. 같은
용역업체라도 대학에 따라 임금과 노동
조건이 천차만별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
이 ‘진짜 사용자’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대학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
하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간접고용을 유지하
고 있다. 2012년 인덕대에서 용역 입찰
에 참가했던 한 업체는 최저임금 이하로
노무비를 설계해서 최종 낙찰을 받았다.
인덕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중앙대 총장은 “직접고용을 하
면 ... 노동쟁의가 자주 발생하게 돼 비용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솔
직하게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 김태흠도

국회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일축하며 “직고용 하면 특하면 파업하니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따라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근본 원
인은 간접고용”이라는 노동자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옳다. 몇 년간 투쟁으로 자
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자신감을 쌓
은 노동자들이 이제 직접고용을 쟁취하
자고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압력을 받아 경희대 등 몇몇 학교
당국이 청소 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를 검
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노동자들에게 더
욱 기대감을 심어 주고 있다.

이번 청소 노동자 투쟁의 전진은 학생들
과 다른 노동자들, 특히 청소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
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 소속의
청소 노동자 대학 분회들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늘었다(2007년 조합원 1백 명으
로 시작, 2014년 현재 1천4백 명). 이것
자체가 청소 투쟁이 비슷한 처지의 노동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올해 투쟁 이후, 서울 소재 대학의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서경지부로 노조 관
련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성북구와 노원구가 생활임금 조례를 통
과시켜 일부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
상했는데, 이것도 그간의 청소 노동자 투
쟁이 좋은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다.

아직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모두 끝
난 것은 아니다. 사측이 최종 합의서에
사인하지 않은 곳이 많고, 특히 인덕대,
서강대, 연세재단 등에서는 원청이 강경
하게 버티고 있다. 인덕대 노동자들은 지
난해 “2014년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의
임금·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
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임금을 올려 줄 수
없다는 학교 당국에 맞서 3월 1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곳들은 학내에
조직된 학생 좌파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아 어려움이 있다. 그럼
에도 노동자들이 굳건히 싸우고, 연대를
건설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이다.

성지현

독자토론광장

4월 9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규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죽는 시늉하라 해서 죽어라 일했는데, 왜 노동자 탓하나”

다음은 3월 22일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본
지는 지난호에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을 비판하는 기사(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를 실은 바 있다.

“부채 문제가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 부채가 너무 커서 우리가 받는 복
지비는커녕 우리 다 잘라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할 거다. 노동자 책임이 아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한 호를 지을 때마다
1억 원 손해 본다. 이것은 공공 임대주택의
특성상 서민들에게 싼 값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예산을 무조건 줄이라고 하면 결국 임대주
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토지주택공사 노동자

“오늘 우리 조합원 중 절반은 온 것 같

다. 원래 2월에 복지카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정상화’ 계획 눈치 보느라 아직도
복지카드가 나오지 않았다. 사내 복지라
고 하지만, 이것도 우리에게엔 임금의 일부
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복리후생비가
많이 깎였다. 우리는 정부 정책대로 한 죄
밖에 없는데, 박근혜는 공공기관 노동자
전체에게 복리후생비 자체를 아예 없애려
고 하고 있어 위기 의식과 반감이 크다.”

기술보증기금 노동자

“박근혜는 우선 공기업들을 공격해서 기선
을 제압하려는 것 같다. 복지는 상향 평준화

해야지, 하향 평준화하려는 건 잘못이다.”

도로공사 노동자

“우리가 잔치했나? 4대강 사업한다고
삼킬 한 게 진정한 잔치다. 공공기관 노동
자들은 유리 지갑이고, 재벌처럼 세금 떼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방만하다고 하는가.”

수력원자력 노동자

“LH 부채가 공기업 부채의 3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 탓이 아
니다. 우리는 정부가 여름에 에어컨 끄고
일하라 해서 에어컨 껐고, 임대주택 지으
라 해서 임대주택 지었고, 죽는 시늉하라
해서 죽어라 일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공
공기관 노동자만 잡는 정부가 문제다.”

토지주택공사 노동자

뜨거운 지지를 확인한 의료 민영화 반대 홍보전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
대하며 보건의료노조가 병원과 주요 도
시 거점 변화가를 중심으로 매주 홍보전
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목동 오목교앞에서도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국민 서명운동’
홍보전이 있었다.

이날 홍보전에는 보건의료노조 이화
의료원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교조 조
합원, 학생행진, 노동자연대 활동가 등
18명이 함께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폭로하며 리플릿
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았다.

날씨가 추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두 시간 동안 3백90여 명이 서
명에 동참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팻말을 유심히 보고 갔고,
한 사람은 격려를 보내며 따뜻한 커피를 건
네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료 민
영화에 대해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

함께한 이대목동병원 조합원들은 병원
내에서 진행한 홍보전에서도 노동자들의
지지가 뜨거웠는데, 거리 시민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며 신이 나서 홍보전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영리사회
사·부대사업, 인수합병 등의 내용을 담
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산별 총파
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과 광범한
연대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

백선희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꼼수

김문성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또 하나의 무기를 내놓았다. 노동부가 3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그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대놓고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 탓이라고 주장한다.

부담을 느낀 기업주들이 중장년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 형태로 조기퇴직을 실시”하고 청년들에게는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노동 현실에 조금만 눈 밝은 사람이라면, 노동부의 논리가 실은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기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수작이란 걸 바로 눈치챌 것이다.

노동부는 생산직 신규자 대비 30년 경력자의 임금이 3.3배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높은 게 문제라고 하지만, OECD 국가에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은 말하지 않는다. 사실 한국 노동자 전체의 평균 근속년수가 6년 남짓인 상황에서 30년 경력자와 신규자를 비교한 것 자체가 상당히 허구적이다.

노동부가 밝혔듯이 기업주들이 “조기퇴직을 실시”해 왔다는 것이야말로 기업주들 스스로 이미 연공급제를 그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직무급제가 더 보편적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정규직 고용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비용을 아끼고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자본가들의 선택의 결과이지 연공급제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직무급·직능급·성과급제 도입·확대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불거진 임금체계 개편 논란에 대한 자본가들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노동부 매뉴얼도 1월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이미 실렸던 내용이다.

통상임금 논쟁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에서 고정 기본급 비중이 적은 것이 문제임이 밝히 드러났다(제조업 평균 40퍼센트). 나머지를 각종 수당과 상여금들이 채우다 보니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고 안 되는지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그동안 사장들은 이런 임금체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임금체계 논란에서 대안의 핵심은 연공급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고정급 비중을 높이고 이를 충분히 인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기본급을 성과주의로 바꿔 고정급을 올리기 힘들고 불안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여금을 성과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것도 통상임금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이다.

성과주의 임금제는 임금 책정을 개별화하고 내부 경쟁을 강화하며 직무 배치나 성과 측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

를 강화시킨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청년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조사를 보면, 고졸·대졸 초임은 직무급 체계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임금 개악 매뉴얼의 목적은, 첫째 **전반적인 임금 하락** 시도이며, 둘째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정책 논평이 고령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라는 듯한 뉘앙스를 비친 것은 잘못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취업 초부터 60세 정년제, 임금피크제 등을 추진해 왔다. 이는 큰 틀에서 “나쁜 일자리”로 고용률 70퍼센트를 확보한다는 ‘신자유주의식’ 사회안전망 계획의 일부들이다. 이런 일자리들로 노후복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불만을 통제하려는 책략이다.

그 점에서 임금 개악 매뉴얼의 셋째 목적은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나쁜 일자리”를 늘리려는 술책**이 될 수 있다. 노동부 매뉴얼도 직무급 도입과 임금피크제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고용불안 등의 책임을 고령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노동계급 내부에서 분열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둘째는 평생고용을 전제로 한 연공급제를 공격함으로써 청장년 노동자들에게 평생고용을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연공급제가



약화되면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감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 매뉴얼의]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고 한 것은 노동

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노동운동은 경제 위기의 책임이 이 체제와 기업주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주장해야 한다.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반대하고 고정급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불필요한 타협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해질수록 고용과 임금에 대한 자본가들의 공격도 심해질 것이다. 임금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단결과 저항을 구축하려면 변혁적 정치가 필요하다.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임금체계는 나라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돼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연공급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호황기에 평생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임금체계다.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숙련 노동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을 점차 높여 주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재직 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 나이가 들수록 교육비와 주거비 등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패턴에도 부합했다.

그러나 이제 세계경제 위기로 연공급제의 전제조건들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주들은 고용과 임금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총 임금비용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착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불황 때문에 노동자 삶의 패턴도 불가피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

자본가들에게 직무급·직능급·성과급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적인 능력과 실적 격차를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전반적인 생산성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실적을 발미로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차등 성과급제는 장기적으로 평균임금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경쟁 기준이 계속 올라갈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끼리제로섬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직무·숙련도 등을 따지는 직무급·직능급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배치한다. 직무·숙련도·실적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직무 배치(인사이드)나 인사평가, 업무 지시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 권한을 강화시킨다. 또 직무 변동이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임금 안정성을 약화시켜 노동자들이 생활을 계획적으로 꾸리기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를 때문에 노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저항해 왔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직무급을 도입했지만, 직무급을 호봉제처럼 운용하는 등 변형된 형태가 아직은 많은 이유다. 그 점을 고려해 노동부 매뉴얼의 예시안도 40대까지는 연공급과 유사하게 임금이 상승하게 돼 있다.

한편, 직무별로 급여를 달리하려면 직무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직능급도 직무가치와 노동자 숙련도를 모두 측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무가치 평가는 산별 차원에서 해야 노동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산별협약

이런 맥락에서 노동운동 일각에선 직무급제가 보편적인 독일·스웨덴처럼 직무가치나 숙련도 평가를 산별 노사공동으로 수행하면 산별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과거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는

기층 노동자들의 반발로 사실상 실패했고, 최근의 공공부문 산별협약에선 호봉제를 폐지하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2000년대 초반 독일 금속 산별의 신임금체계 협약이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 격차를 줄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전 제도에 견줘 이 협약으로 임금비용이 순수하게 오른 기업은 4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직무가치 평가를 노사공동으로 해도, 직무 배치가 사측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큰 약점이다.

이들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산별 협약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물신화**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직무급제에서도 노조의 투쟁으로 임금을 상승시킬 수는 있다. 1987년 이전까지 한국 기업 대부분이 연공급제였지만, 임금·고용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고용보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청장년 노동자들에게는 연공급제가 무용하거나 해롭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에게는 남의 일로 여겨질 것이다. 예를 들어 연공급제에서 생애임금의 평균이 월 2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고용불안을 느끼는 젊은 노동자들은 월 1백만 원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월 2백만 원을 받는 임금체계를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국의 자본가들과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악의 방향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 자본가들이 직무급제를 핵심으로 들고나온 맥락을 봐야 한다. 정규직 임금을 유연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자본가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바꿔치기해 왔다.

일부 기업은 정규직과 직무를 분리해 비정규직을 값싼 직무에 가둬 버리고 임금과 승진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 직무급을 이용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호봉제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인간질과 역공이 통한 것은 노동운동 상층 지도자들이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통한 노동조건 방어와 향상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적 타협주의가 문제지, 임금 제도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임금체계는 노동계급 대중의 실질임금 수준, 단결이란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사장들이 어떤 경제 조건에서 어떤 목적으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지 그 맥락을 짚어야 한다. 그 점에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시도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호봉제 요소를 방어하면서, 고용 보장과 충분한 고정급 인상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